2026
11
since 1990 | vol. 432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nara.kdi.re.kr

나라경제

ISSN 1227-8033
9 771227 803002 11

Interview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Issue

돈값이 비싸진다,
다시 고금리 시대

Now

천고마비의 계절,
살 안 찌고 날 수 있을까

Special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열린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P Preview + 특집 각 칼럼의 주요 내용과 용어 등을 소개합니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열린다

1 도입 — 체류외국인 300만

국내에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머무는 외국인이 2026년 7월 말 기준 290만3,46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91일 이상을 체류하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 224만6,713명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며,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약 150만 명에 달한다. 체류 목적도 다양해 유학·연수 체류자는 32만2,489명, 비전문취업 체류자는 35만421명, 영주자는 23만962명, 결혼이민자는 15만7,807명으로 집계됐다.

2 노동 — 고용허가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3 정책 —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지난 9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대학과 유학원 간 표준협약 마련, 외국 학력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유학생 선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교육성과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4 해외사례 — 시티키(CityKey)

미국 시카고시가 이민자를 비롯한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민 신분증 프로그램. 미국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등도 신원과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 대중교통 결제카드, 의약품 할인 등의 기능을 제공해 현지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민자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5 이주배경청년 — 국적 정체성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과 자의식을 뜻한다. 법적 국적과 달리 성장 환경과 언어, 문화적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국가 간 이동을 경험한 이주배경청년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기도 한다.

6 제언 — 사회통합지수

이민자의 사회 적응 수준과 수용하는 사회의 통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2024년 법무부가 수행한 연구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64.9점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실제 생활과 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통합 상태'는 75.7점이었지만, 사회의 수용 준비 정도를 뜻하는 '통합 촉진'은 55.0점에 그쳤다. 이는 이민자 개인의 적응 노력에 비해 수용사회의 인식과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contents

16

24

34

S Special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열린다

도입

이웃이 된 그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됐나 10
양윤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

인포그래픽

체류외국인의 90%, 한국에 계속 남길 원한다 12
『나라경제』 편집실

노동

이주노동자로부터 선택받는 국가와 일터 만들려면 14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보다 우수인재 확보와 인적자본 축적에 정책 초점 16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해외사례

미국·캐나다·호주 지방정부, 공공-민간 지원 연계로 이민자 지역 정착 돕는다 18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주배경청년

외국인 엄마를 둔 '자녀'라는 존재를 넘어 삶을 개척하는 '청년'으로 20
고예나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 저자

제언

이민정책을 국정의제로… 부처 간 이견 조정하고 전문성 살려야 22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I Issue

돈값이 비싸진다, 다시 고금리 시대

도입

다시 찾아온 글로벌 '긴축의 시대' 30
정채희 한경비즈니스 기자

인포그래픽

미 기준금리 4% 시대… 대출금리 0.5%p 오르면 추가 이자 6조5천억 원 31
『나라경제』 편집실

실물경제

최근에 오른 기준금리, 내 통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 32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주식시장

금리 인상이 꼭 주가 하락을 의미하진 않는 이유 33
김효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채권시장

미 국채 10년물 금리 6%에 이를 수도… 물가와 매수세가 변수 34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채권분석부 부전문위원

대체자산

금리 인상 선반영한 비트코인 가격… 미 연방정부 매입은 아직 35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

기업

AI 호황에 가려진 기업들의 신용위험 늘고 있다 36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I Interview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인터뷰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24
양은주 『나라경제』 편집장

N Now

천고마비의 계절, 살 안 찌고 날 수 있을까

도입

당신도 나도 '맞은자로'? 44
김잔디 연합뉴스 정책사회부 기자

부작용

피로, 췌장염, 우울감… 임의로 약물 변경·중단 말고 동네 약국 들러보세요 45
김형선 약사

대체재

먹은 만큼 살 찌지 않는 과일스무디가 있다? 46
김태희 과학동아 기자

제언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 치료문턱 낮춰야 47
장형우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경제정책해설

에너지, 양자, 공급망 등 미래 신산업 개척 위한 씨앗 뿌린다 50
최윤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

자동차부터 먹거리, 여행까지…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열린다 52
유제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52

중저신용 대출 우수 업체에 투자한도 상향 등 혜택 준다 54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세계는 지금

OECD

지난해 세계 각국은 무엇에 세금을 더 걷었을까 58
한세온 주OECD 대표부 국세주재관

58

WTO

WTO 의사결정 개혁 논의, '컨센서스'를 위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61
민현지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칼럼

K인사이트

플랫폼 경쟁법 집행, 적시성과 정확성 사이 38
양용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라비 샨카르 판디트 코넥트 대표 40
"하나의 플랫폼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장벽을 낮출 겁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쓸모없음의 쓸모

물건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 42
김중혁 소설가

오늘도 똑똑한 금융생활

금융시장을 읽는 열쇠, 채권과 금리 48
이현 중앙일보 기자

밥 한 그릇의 위로

놋그릇은 어디로 갔나 56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56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내년 기후 의제의 중심지 에티오피아… 그린 ODA로 한국기업의 기회 넓히려면? 64
박진석 KOTRA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무역관장

강양구의 과학 토크

누가 '부캉이'를 '죠스'로 내모는가 66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66

AI 트렌드 따라잡기

'AI 개발 늦추자'던 빅테크 CEO들,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나 68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로드리고의 여행 한 페이지

그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사진이 된다 70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시평

AI 시대 한국경제 생산성 혁신의 조건 74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나라경제

2026 11 vol. 432 since 1990

· 발행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발행인
김세직 KDI 원장

· 편집인
김후진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 편집주간
이용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실장

·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김의택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연웅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박인정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김정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연경 기획혁신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홍보담당관
산업통상부 주원석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획조정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염정섭 녹색전환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태연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소성환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임창현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진수웅 기획총괄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정섭 혁신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임경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최성규 정책홍보팀장

· 편집간사
김선정 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연구원

· 편집장
양은주

· 취재·편집기자
오성록, 이강선, 황현성, 정서현

· 감수
이재열

· 발행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ISSN
1227–8033 11

·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e-mail
nara@kdi.re.kr

· 발행일
2026년 10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37권 11호(통권 432호)

·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 기사문의
044–550–4646

· 디자인·인쇄
텍스토

· 사진
아유림 스튜디오

· 표지 디자인
김보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나라경제팀

· 10월호 당첨자
김호철(대전 서구)
최충환(서울 도봉구)
황경연(경기 구리시)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facebook.com/kdinara1990
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S Special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열린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이 293만 명을 넘어서며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2021년 말 약 196만 명에서 5년 만에 90만 명이 넘게 늘었다. 특히 장기 체류외국인은 228만 명으로 전체의 77.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 목적도 단순노동을 넘어 유학·연수, 영주, 결혼이민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장기 체류와 정착이 늘면서 외국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적 시선이 존재해 이들과의 공존을 위한 이민정책 전환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경제』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을 산업과 지역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이웃으로 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청년으로 성장하며 경험한 현실도 담았다. 국적과 문화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이엡프엉
휘엔짱
수야메
아웅
아잉
귀엔
덧
싸
문흐
비마니
울산
디나엉
칸드리아
숑시렝
가바야르
그르노블엑
투투
aka
메리
비
만키노
안나

이웃이 된 그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됐나

양윤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
moneysheep@mt.co.kr

국내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90만3,46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 약 306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목할 변화는 체류 기간이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은 9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 체류자다.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장기 체류자는 224만6,713명으로 전체의 77.4%였다.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은 약 150만 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체류 목적도 다양하다. 유학(D-2)·연수(D-4) 체류자는 32만2,489명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 35만421명과 비슷한 규모였다. 영주자(F-5)는 23만962명,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자(F-6)는 15만7,807명으로 집계됐다.

단순노동을 하던 외국인이 숙련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바꾸는 사례도 늘었다. 비전문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한 외국인은 2017년 281명에서 2024년 1만3,456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누적 전환 인원은 4만7,803명에 달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더 이상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집을 구하고 물건을 사고 병원을 이용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 기업에는 근로자, 대학에는 학생, 지역에서는 소비자이자 주민인 셈이다.

이에 이민정책을 되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출간된 덴마크의 이민정책을 다룬 책『노동력과 함께, 사람이 온다』가 꼭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에티오피아계 이민 2세인 저자 마티아스 테스파예는 이민자 수용과 사회통합을 강조한다.

체류외국인 290만 돌파, 체류 기간 늘고 목적도 다양해져… 행정인력 부족 등 대응 역량은 한계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이들의 취업과 체류를 관리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행정인력은 외국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류외국인은 82만6,466명(42.2%)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 공무원 정원은 2,568명에서 2,668명으로 100명(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인력의 상당 부분은 국제선 운항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항만 심사 업무에 배치돼 국내 장기 체류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자가 지난 9월에 찾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창구에는 접수된 서류가 직원의 머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을 접수한 뒤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야 서류 심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체류 요건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므로 정규 근무시간 안에 일을 마치기 어려워 야근이 일상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

행정 병목도 생겼다. 지난해 전국 출입국 사무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평균 19.2일, 최장 77일이었다. 허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무소를 방문할 차례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다. 예약제로 민원실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줄었지만 예약 자체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행정 지연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나 취업 자격 변경이 언제 처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면 기업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과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한다. 피해 조사와 구제에는 세금이 쓰인다.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은 2023년 791억2,400만 원으로 2019년의 402억8천만 원보다 약 96% 늘었다.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정책에는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관여한다. 외국인

비전문취업 체류자 | 숙련기능인력 | 행정 병목 | 방문예약 대기기간 평균 19.2일

지난 9월 28일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글로벌인재관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명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만 봐도 비자와 체류는 법무부, 대학과 유학생 관련 정책은 교육부, 고용과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산업별 인력 수요는 산업통상부, 지역 정착은 지자체가 맡는다. 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광객은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관련돼 있다.

부처별 정책 분절과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도 개선 과제이며
산업·지역 수요에 맞춘 인력 유치와 안정적 생활 여건 마련 필요

각 부처의 목표도 다르다. 교육부와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무게를 두지만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핀다. 산업통상부와 기업은 필요 인력 공급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해 인구와 소비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졸업 후 전공과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있어야 지역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유학생 유치와 취업 지원, 비자정책을 정부 부처가 함께 설계하고 부처 간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책을 상시 조정하고 결과를 점검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중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다섯 차례는 문서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과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서면회의였다. 전문가들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충돌하거나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제때 파악하고 해결할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300만 시대에는 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춰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어느 업종에 어떤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지 살피고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 입국 후 취업 여부와 근로조건, 지역 정착 상황을 점검해 도입 규모와 지원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치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 체류 민원을 제때 처리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권익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생활정보 안내,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의 법과 생활규범을 익히도록 도와야 한다. 주민 간 불편과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계절근로자 | 체류 자격 변경 | 비자정책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권익 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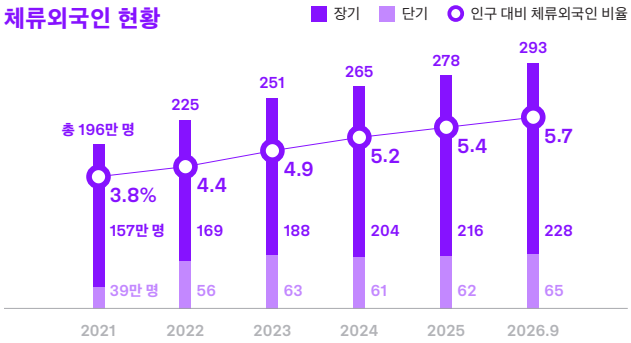
체류외국인의 90%, 한국에 계속 남길 원한다

체류외국인이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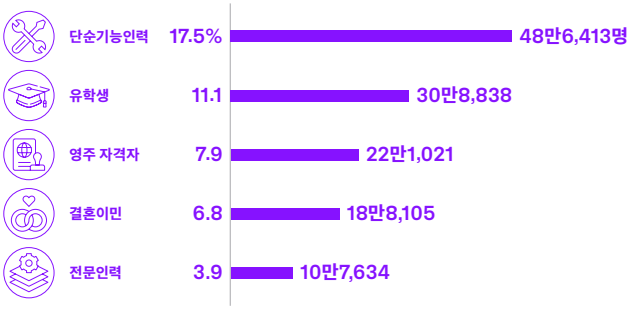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6, 5쪽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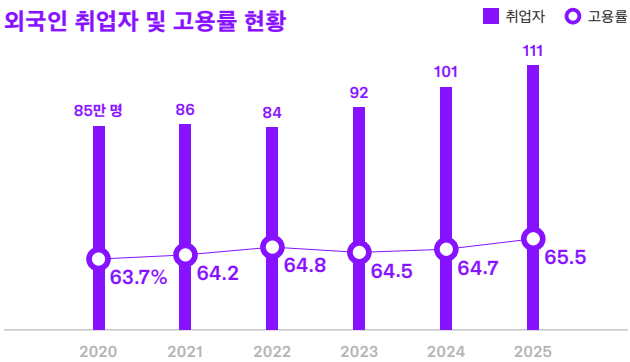
주: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자료: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6, 42쪽;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9월호, 21쪽;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 현황」

2025년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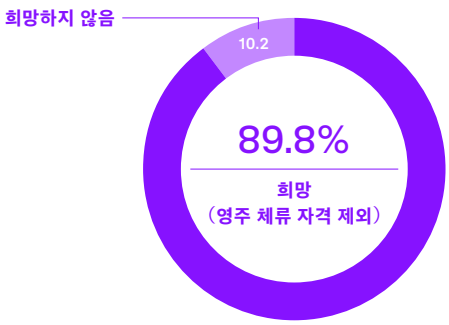
주: 유학생(비자 D-2, D-4-1, D-4-7), 결혼이민(비자 F-2-1, F-5-2, F-6), 전문인력(비자 C-4, E-1~E-7)
자료: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6, 44~46쪽

외국인 취업자 및 고용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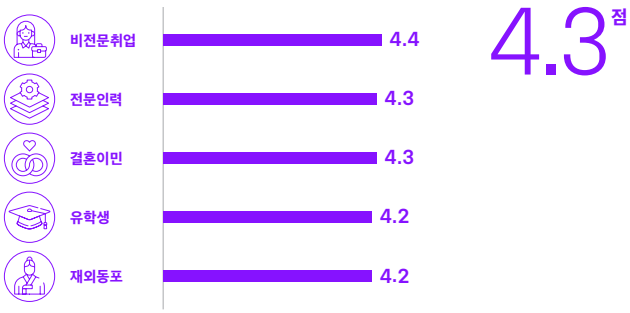
주: 2025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대상 표본조사
자료: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 2쪽

계속 체류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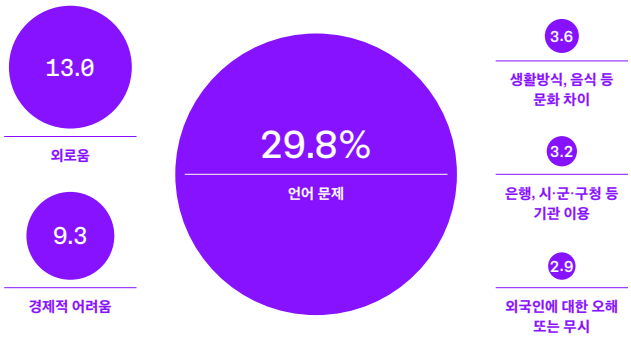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 49쪽

체류외국인 한국 생활 만족도(5점 만점)



주: 2024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대상 표본조사, 전문인력(비자 E-1~E-7), 결혼이민(비자 F-6)
자료: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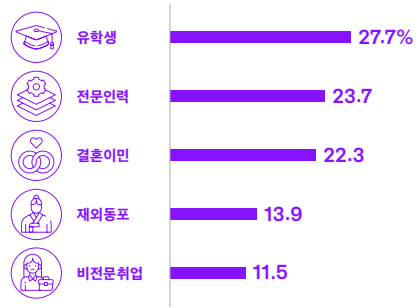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1순위)



자료: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4, 32쪽

체류외국인 차별 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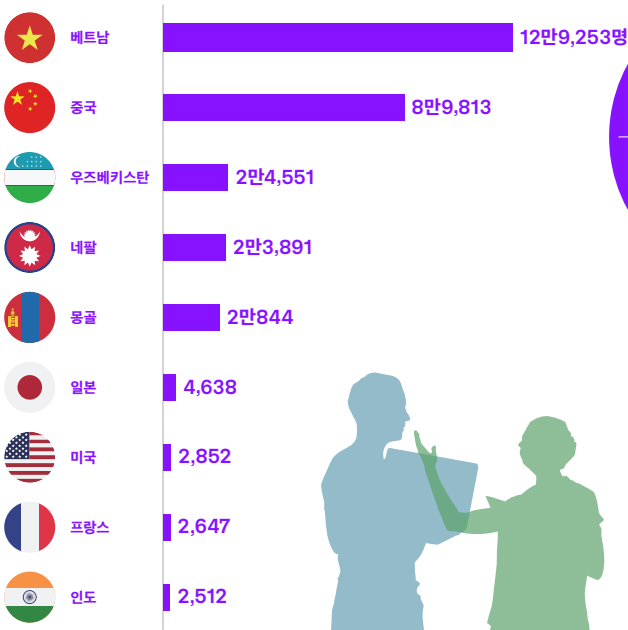
17.4%



자료: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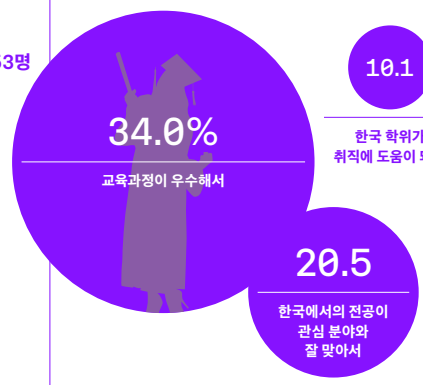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현황

주요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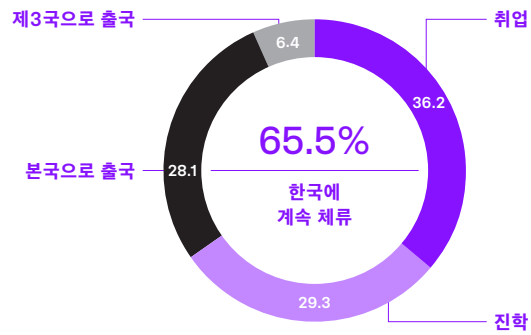


주: 중국 유학생은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9월호, 48쪽

한국으로 유학 온 주요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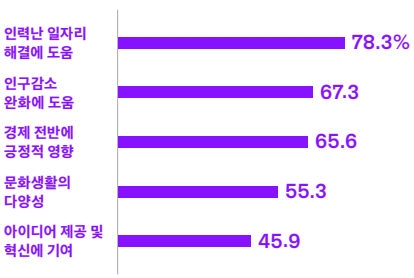
졸업 후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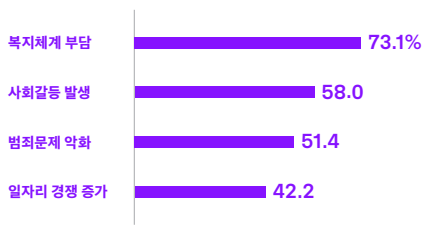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 54·57쪽

다문화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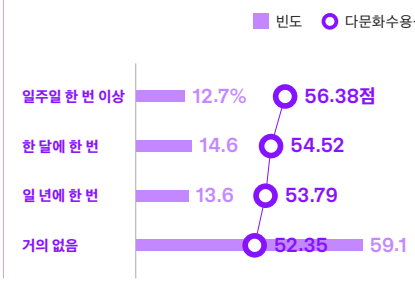
이주민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주민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빈도별 다문화수용성



주: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을 합한 값, 19~74세 성인 6천 명 대상 조사

주: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5, 79~83쪽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이주노동자로부터 선택받는 국가와 일터 만들려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yukjincho@kli.re.kr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말과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래 이주노동의 유형은 단순기능인력부터 현장의 숙련기능인력, 그리고 전문지식인력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외국인력의 증가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취업 관련 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은 2022년 약 45만 명에서 2025년 약 59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 소지자는 26만8천 명에서 34만4천 명으로 증가했다.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계절근로(E-8) 체류 자격 소지자도 지난해 8월 말 약 6만1천 명에서 올 8월 말 약 8만 명으로 31.3% 증가했다. 전문직과 숙련기능직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소지자는 2024년 말 약 6만4천 명에서 2025년 말 약 8만2천 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E-7-1)도 1만1,789명에서 1만3,073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취업 목적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 등의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 등을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기준 271만5천 명이다. 이주는 인력의 유입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직부터 전문직까지 외국인력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위험한 일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오늘날 우리는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이는 점점 덜 태어나고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인력난이 해결되기 어렵다. '왜 일할 사람이 부족한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구인난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현실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내국인 대신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 내국인이 견디기 어려운 일자리를 외국인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일의 어려움과 위험은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서 잘 드러난다. 신정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3만684명, 체불액은 1,548억 원이었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액은 43.6% 증가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반복된다.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는 9,872명, 사망자는 99명이었다. 왜 이주노동자는 일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어려운가.

이러한 상황을 이주노동자가 한국어가 서툴다거나 노동관계법령과 안전 수칙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위험한 일을 맡으면서도 작업을 멈추자고 말하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터를 떠나기 어려운 고용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체류 자격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 일을 그만두는 문제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부당한 처우에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 '본국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으니 이 정도쯤은 감수할 것'이라는 차별적 인식이 더해지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일터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9천 명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3만684명 | 체불액 1,548억 원 | 산업재해자 9,872명

불이익 걱정 없이 작업 중단, 작업환경 개선 요구할 수 있어야…
이주노동자를 지역사회 주민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 마련을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일터를 떠나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입증하는 동안에도 위험한 일터에 머물러야 한다면 권리구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분리와 임시 주거, 통역과 법률·구직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인력난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할 만한 조건을 만들고 괜찮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곧 생산성 향상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작업환경과 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업을 설명하고, 실제 설비와 업무에 맞춰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위험한 설비를 개선하고 충분한 작업 인원을 배치하며 무리한 작업 속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건설업과 조선업에서는 공사기간과 납기를 결정하는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농어촌과 영세사업장에는 안전설비 지원과 현장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작업 중단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수칙을 아는 것과 실제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로 임금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고 창구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부터 체불임금 회수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를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일터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안전한 주거와 의료 접근성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용자가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주노동자 당사자도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와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언제까지나 차고 넘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국을 떠나 일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한국이 이들로부터 선택받는 나라가 되려면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 존중받는 일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을 개선하는 일이 곧 한국을 일하러 오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 일터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지난 9월 7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고랭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업장 변경의 자유 | 안전 관리체계 개선
임금체불 예방 |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보다 우수인재 확보와 인적자본 축적에 정책 초점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hychoi414@korea.kr

올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1년 앞서 달성한 것이다. 2023년 18만2천 명이었던 유학생은 2026년 30만7천 명으로 늘었다. 한국이 전 세계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넘어선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확대해 온 유치 기반을 어떻게 인재양성의 성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유학생 증가가 대학과 국가의 인적자본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유치 규모와 함께 교육과정과 성과를 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7년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 올해 조기 달성… 선발–교육–진로 전 과정 지원하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고도화

한국은 OECD 지표에서 유학 목적지로서의 매력도가 37개국 중 9위로 평가될 만큼 주요 유학국가로 성장했다. 반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지표에서 해외 고급인재가 일하고 정착할 국가로서의 매력도는 69개국 중 61위 수준에 그쳤다. 유학생의 전공도 인문사회계열이 63.9%인 데 비해 이공계는 23.9%다. 높아진 한국 유학의 매력을 우수인재 확보와 인적자본 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치 이후의 교육과 진로까지 정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난 9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마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구축한 유치 기반 위에서 선발–교육–진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학이 유학생 교육에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책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이다.

먼저 좋은 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선발에서 시작된다. 국제 유학생시장에서는 학생과 대학이 서로에 대해 가진 정보가 제한적이고 유학원이 개입하며, 국가마다 학제와 학력 서류도 다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학생과 대학 간 적절한 매칭을 어렵게 하고 입학 이후 학업 부진과 중도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과 유학원 간 표준협약을 마련하고 외국 학력 검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학생과 대학의 탐색비용과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유학시장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선발은 학생과 대학 간 좀 더 적합한 선발과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성과를 높이는 출발점이 된다.

선발 이후에는 한국어와 기초 학습지원부터 전공교육과 학사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아주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들. ⓒ 연합뉴스

유학 목적지 매력도 9위 | 고급인재 정착국가 매력도 61위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 외국 학력 검증 강화

관리,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학업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유학생 증가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지원 역량에 대한 충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유학생 교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학업지원과 언어능력, 중도탈락, 생활·진로 지원 등 실제 교육성과와 대학의 개선 노력을 보다 충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이 교육의 질과 학생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유인체계를 교육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인재양성의 성과가 사회의 수요와 연결되는 구조도 필요하다.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2020년 3만6,450명에서 2024년 3만9,83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유학생정책을 단기적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관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구 경험을 쌓도록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학생의 전공과 적성, 산업의 미래인재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도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공계 등 전략 분야의 우수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학생이 학업과 연구를 지속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027년부터 선발 예정인 '해외인재 우수학과'도 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과 학과가 자신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세계의 우수인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공계 인재 장학지원 확대하고 '해외인재 우수학과' 신설…
지역대학은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 참여 기회 등 제공해야

지역에서도 핵심은 인재와 기회의 매칭이다. 올해 비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47.4%까지 높아졌다. 지역대학이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교육과 현장경험,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유학생이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유학생에게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배움의 과정이자 지역사회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지역 정착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교육과 교류를 통해 학생과 지역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한 인재가 스스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지속 가능하다.

유학생정책의 편익은 졸업 이후에도 이어진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국내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본국이나 제3국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 이들이 형성하는 연구·산업·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성과를 넘어 우리 대학들과 국가에도 긍정적인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를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남았는지만으로 평가하기보다 한국에서 형성된 인적자본과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가치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은 하나의 목표 달성이면서 새로운 출발점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숫자가 아니라 30만 명이라는 기반에서 어떠한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다. 신뢰할 수 있는 선발, 대학의 책임 있는 교육, 전공과 산업·지역 간 더 나은 매칭이 이어질 때 유학생정책은 단순한 국제학생 유치정책을 넘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의 인적자본을 함께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을 선택하게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고 그 성과가 대학과 지역, 산업과 세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한국 유학의 다음 단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 해외인재 우수학과 | 연구·산업·사회적 네트워크

미국·캐나다·호주 지방정부, 공공-민간 지원 연계로 이민자 지역 정착 돕는다

시카고 신분증 '시티키'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도 요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결제, 의약품 할인 기능까지 갖춘 이 카드는 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djlim@sch.ac.kr

저출생·고령화와 산업별 인력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조건, 근무지역의 통근·생활 여건 미흡 등으로 제조업·농업·돌봄 분야에서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유입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한국은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4%(2025년)를 차지하며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14.8%(2024년), 캐나다의 이민자 비율은 23.0%(2021년), 호주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32.0%(2025년)다. OECD 국가 전체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도 11.5%(2024년)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이민자가 인구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주요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장벽과 해외 학력·자격 인정의 어려움은 이민자의 능력 활용을 제약하고, 주거·공공서비스 부족과 차별은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 유입정책과 함께 생활 적응과 자립,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자가 실제로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지역이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호주 멜버른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주민 신분증 '시티키' 제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 높이는 시카고…토론토는 학교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학부모 적응 도와

시카고 지방정부는 신분증 확보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 정보 부족으로 이민자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주민 신분증인 '시티키(CityKey)'다. 미국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등도 신원과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 대중교통 결제카드, 의약품 할인 기능을 함께 제공해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특히 현지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시카고 시립도서관은 영어 학습과 시민권 시험 준비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비영리 이민자 지원단체와 법률지원단체로 연결한다.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 정부와 도서관이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맡고, 민간단체가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민간의 전문성을 연결해 이민자의 생활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토 지방정부는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와 가족이 교육·주거·의료 등 필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청과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신규 이민자 상담창구'에서는 비영리 민간 정착 지원기관의 상담원이 무료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언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시 정부가 상담 장소와 서비스 연결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이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에는 별도의 이용 자격이 적용될 수 있다.

토론토에서는 학교와 민간 정착 지원기관이 협력하는 '학교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착 지원 담당자가 신규 이민자 학생과 부모에게 먼저 연락해 학교생활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안내하

이민자 지역 정착 | 시티키(CityKey) | 신규 이민자 상담창구 | 학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지난 8월 26일 호주 멜버른 중심업무지구(CBD) 일대에서 열린 루미너스 랜턴 퍼레이드에 참여한 이주민 및 난민 공동체 멤버들.
ⓒ AMES Australia

고 학생·학부모·교직원 간 협력을 돕는다. 부모가 현지 언어와 교육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녀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곳 시립도서관에서도 일대일 정착 상담과 생활정보 설명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학교와 도서관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가족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멜버른, 공동 활동 공간인 '다문화 허브'서 언어·취업·교류 지원…
우리 지방정부도 이민자 구성·수요 파악해 필요서비스 조정해야

멜버른 지방정부는 이민자의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문화 허브'를 운영한다. 시 정부가 시설을 소유하고, 이민자 교육·취업·정착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빅토리아주 공공기관 에임스 오스트레일리아(AMES Australia)가 운영을 담당한다. 무료 영어회화 수업과 취업 모임을 제공하며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고용·주거·교통·정착 지원정보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의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 허브는 일반 주민에게도 공간을 개방하고 주민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공간 이용료를 낮춰 자체 모임과 행사를 지원한다.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이민자와 기존 주민이 만나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한다. 이 사례의 특징은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결합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와 산업별 인력난으로 향후 이민자 유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말한 세 도시의 규모와 제도는 다르지만, 공공시설을 활용해 전문기관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연결한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는 소관 사업의 기준과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민자 구성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이민자가 실제로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별 지원이 이민자의 지역 정착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처의 사업 수행기관을 비롯해 가족센터,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대학, 학교,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상담과 기관 간 서비스 의뢰 절차를 마련해 지원의 중복과 공백을 줄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양육 지원을, 동포에게는 생활 적응 및 취업 상담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업·진로·취업과 체류 전환 안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학생에게는 학교 적응과 한국어 학습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을 고려한 한국어·산업안전·노동권 교육과 주거·의료 상담을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 민간단체의 현장 상담과 주민 교류를 결합하고 이민자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한다면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수용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허브 | 에임스 오스트레일리아 | 전문기관과 민간단체의 지원 연결

외국인 엄마를 둔 ‘자녀’라는 존재를 넘어 삶을 개척하는 ‘청년’으로

고예나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 저자
5505yi@naver.com

“혹시 외국인이세요?” 대학생 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듣는 질문이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했다. 나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왜 외국인이 아닌지를 굳이 설명하진 않았다. 상대방의 단순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외국인일 수도 있을까?

지극히 한국적이고 전통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30대를 바라보는데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나는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엄마에게서 태어난 소위 다문화 가정 자녀다. 요즘엔 이주배경청년이라는 더 좋은 표현이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를 수식하던 단어는 ‘다문화’였기에 입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기에 내 몸의 절반은 필리핀 피가 흐른다. 외가 친척들도 필리핀에 있다. 집에선 엄마가 만든 시니강(Sinigang), 피낙벳(Pinakbet) 등 필리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손으로 먹는 등의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 언어인 타갈로그어도 아주 조금이지만 습득하며 자랐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진 않았다. 내가 자라온 가정은 지극히 한국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다. 전남의 시골 마을에서 오래 산 할머니와 아빠는 한국의 전통을 아주 중요시했다. 설날, 추석, 시제(時祭), 할아버지 제사는 가정 내 큰 행사였다. 절기도 빠트리지 않고 매년 챙겼다. 정월 대보름에 아빠는 자정 넘어서까지 마을 아저씨들과 사물놀이를 하며 마을을 돌아

올해 2월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가 2025년 10월 한국폴리텍다솜고 재학 당시 실습을 하던 장면. ©한국폴리텍대

다녔다. 그날 밤엔 집안의 불을 끄지 않았다. 동지 때는 할머니가 새알을 굴리며 팥죽을 쑤셨다. 농사짓는 집이었기에 이른 겨울부터 늦은 가을까지 논과 밭을 꾸리며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에 나는 내 또래보다 더 전통적인 한국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한국인’일까? 동의하지 않는다. 한 번도 나의 한국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국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를 집필할 때인 22살이 돼서야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꺼내 올렸다. 그만큼 정체성을 크게 의식하면서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남들에게 한국 정체성 100%에 필리핀 정체성 10%를 합쳐 총 110%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정체성을 꼭 100%라는 틀 안에 가둘 필요는 없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청년 국적 정체성 국제결혼

다고 생각해서다. 나는 언제나 온전히 한국인이었고 한국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2026년 현재 3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시민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다문화 가정은 언어적·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자녀들은 언어 학습과 교육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에선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만을 다루고 특히 뉴스는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말한다. 이러한 묘사가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자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인 나와 엄마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존재다. 인간미와 개성을 가진 개인이고 이웃이며 직장 동료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인간미·개성 가진 다면적 존재…
정보·교육 격차 해소 등 복지 접근성 높여 주길

그러나 여전한 고정관념과 얄팍한 해석이 우리를 주눅 들게 한다. 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내가 가진 다양성을 정말 좋아하고 아낀다. 남들에겐 없는 나의 특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나의 필리핀 정체성을 아끼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남에게 내 가정에 대해 말할 때가 오면 원치 않아도 머뭇거리게 된다. 상대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내게도 투영할까 두려움이 앞선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진 않을까 무섭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선 다문화 가정 당사자의 다층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더 보여줘야 한다. 이를테면 결혼이주여성은 언제나 노동하고 있다. 논과 밭에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며 사실상 한국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필리핀 이모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만나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는 내향적인 편이라 집에서 혼자 쉬는 것을 더 선호한다. 같은 필리핀 출신이더라도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

다문화 가정 자녀도 노동하고 있다. 나와 친구들, 내 동생들도 전부 성인이 돼 일터에서 노동하고 기술을 배우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언제까지고 외국인 엄마를 둔 '자녀'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청년'이다.

다문화 가정은 농촌 거주 비율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보 부족과 교육 격차를 겪기도 한다. 우리 집도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아빠는 나이가 많고 엄마는 외국인이라 자녀 양육, 교육과 문화생활 등의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 진학에 관해 부모와 줄곧 상담하는데 나는 대학 종류, 입학 전형, 장학금, 기숙사 등의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가정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니 나도 별 뜻 없이 입시를 마쳤다.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나의 무기력을 비단 성격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자란 마을은 시골에서도 하루에 버스가 네 대만 들어오는 산골이라 읍내 복지관이나 도서관, 영화관에 가기가 어려웠다. 농사는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나기 때문에 매월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학원조차 다니기 어려웠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체념과 무기력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문화 향유나 학업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든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복지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 많이 경험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이들의, 아니 우리들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언어적·문화적 갈등
다문화에 대한 편견
언어 학습, 교육 발달에서 어려움

이민정책을 국정의제로… 부처 간 이견 조정하고 전문성 살려야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my.yoo@mrtc.or.kr

쌍방향 통합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서로에게 맞춰 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주민의 적응 노력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사회도 이들을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 맞을 준비를 할 때 이민정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체류외국인은 293만1,688명으로 2021년 말 약 196만 명에서 5년이 채 안 돼 90만 명 넘게 늘었다. 숫자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다. 일정 기간 일하고 돌아가는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지역에 뿌리내리는 이웃이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국내 정주 목적의 체류자가 약 108만 명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이들과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 것인가다.

이주민의 국내 정주 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 동의는 4.6%… 내국인과 지역사회도 통합정책 대상에 포함할 필요

그러나 우리 이민정책은 여전히 유입과 체류 관리, 그리고 이주민 동화 중심의 통합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입과 체류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계획에 이민 규모를 연동하는 캐나다·호주(계획 이민형)나 전문인력에 문호를 넓히되 정주는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독일(선별적 개방형)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대만처럼 이민을 '인력 확보' 중심으로 다루며 정주를 유보하는 노동 수요 한정형에 가깝다. 단기간 일하고 돌아간다는 전제로 설계된 체류 제도는 장기 정착을 원하는 이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경로를 보여 주지 못한다.

통합 측면도 마찬가지다. 이주민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 적응 노력은 통합의 기본이고 수용국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일정한 동화도 필요하다. 다만 이주민이 빠르게 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이주민 수요가 국가 차원에서 생기는 지금, 이주민의 적응에만 기대는 통합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2024년 법무부가 수행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64.9점이었다. 이민자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통합 상태'는 75.7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사회의 수용 준비를 뜻하는 '통합 촉진'은 5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민자 4명 중 1명(25.2%)은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내국인 가운데 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 응답은 단 4.6%에 불과했다. 지금의 통합 성과가 사회의 준비보다 이민자 스스로의 노력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쌍방향 통합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서로에게 맞춰 가는 과정을 뜻한다. EU가 2004년 채택한 이민자 통합정책의 공동 기본원칙 첫 항목에서는 통합을 이주민과 거주민 모두의 상호 조정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를 우리 정책에 적용한다면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체류 자격별 전환 경로를 통합 단계와 연결해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장기 체류와 영주, 국적 취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미리 알아야 이주민은 정착을 계획하고 지역은 이들을 구성원으로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국민(내국인)과 지역사회를 통합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간 이민통합정책의 대상은 이주민이었고, 국민(내국인)은 주로 인식 개선의 대상으로만 다뤄졌다. 통합 촉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이 공백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와 일터, 동네에서 이주민과 마주하는 주민, 공무원, 교사, 고용주가 다양성을 다룰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일이 통합정책의 한 축이 돼야 한다.

노동 수요 한정형 이민정책 | 사회통합지수 | 쌍방향 통합 | 체류 자격별 전환 경로

셋째, 통합의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야 한다. 사회통합지수 측정이 시작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여기서 나아가 이주민의 적응뿐 아니라 수용사회의 인식과 제도 변화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되돌리는 체계가 필요하다.

유입에서 정착·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 하나로 잇는 설계 필요…
지자체에선 통합 정착지원 체계 구축해 지역 정착 전 과정 도와야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하려면 부처 간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민 관련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유학생, 동포 등 대상별로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고, 유입에서 정착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로 잇는 설계도 아직 부족하다.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있지만 부처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새 조직을 만들거나 부처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 각 부처가 쌓아 온 전문성을 살리는 편이 효율적이다. 필요한 것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정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며, 현재로서는 이민정책을 주요 국정의제로 다루고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처 간 조정에 나서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력하다. 지난 9월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을 인구정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이주민 전문위원회를 둔 것도 이민정책 가운데 인구와 맞닿은 영역을 인구전략과 연계할 계기가 된다.

중앙의 조정은 지역의 정착지원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시군구의 통합 기반 점수는 평균 53.5점으로 광역자치단체(64.4점)보다 낮고, 외국인 1인당 사회통합 자체 예산이 0원인 곳도 있다. 지원기관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력지원센터처럼 체류 자격에 따라 나뉘어 있어 자격이 바뀌면 지원이 끊기기 쉽다. 부처 간 조정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이들 기관을 연계하거나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행정자료를 연계할 때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민의 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능하다.

외국인 300만 시대는 우리 사회의 구성이 달라졌다는 신호다. 이주민의 적응 노력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사회도 이들을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 맞을 준비를 할 때 이민정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 주재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 연합뉴스

통합 성과 측정 | 이주민 전문위원회 | 「인구전략기본법」 | 이주민 정착 전 과정 지원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일시—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장관 프로필

서울대 의학 박사	
2003 ~ 200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장
2005.10. ~ 2013.02.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장, 질병정책과장, 보건산업기술과장, 응급의료과장 등
2014.03. ~ 2017.0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2017.07. ~ 2020.0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2020.09. ~ 2022.05.	질병관리청장
2022.10. ~ 2023.08.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감염병정책연구위원
2023.09. ~ 2025.07.	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기금교수
2025.07.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Q 취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때와는 또 다른 무게였을 것 같은데요, 그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요?

국민 복지와 건강에 관련된 것은 모두 보건복지부 업무이기에 책임이 무거웠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저출생·고령화 시대 늘어난 돌봄 부담은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통합돌봄 시행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아직 도입 초기지만 앞으로 국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말씀처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보완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기준 약 9만3천 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그중 약 7만9천 명에게 1인당 평균 3.5건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지자체가 신청자 개개인의 필요를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개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워낙 큰 전달체계를 개편하다 보니 말씀처럼 보완할 과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읍·면·동 등 현장의 업무가 과중해서 연말까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배치해야 합니다. 아직 서비스 공급 기관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이나 운영 역량이 다르다 보니 지역 격차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도 노력을 더 기울이려 합니다. 9월에는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도 마련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을 끊김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Q '신청하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셨는데요.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지원을 위해 어떤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나요?

그간 복지급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돼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정보만 있으면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65세가 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Q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 인상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어서 이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고 지원액도 커집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K자형 양극화가 완화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출생아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려면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나뉘어 있는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해 출생 직후에 집중되는 양육비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1년간 첫째 1천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후 1,5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때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우대지역을 구분해 해당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성장 과정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0~12세까지 확대하고 기본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더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과 불안을 덜겠습니다.

Q 지난 9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가족이 감당하던 돌봄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기 조기 개입부터 아동·청소년기의 방과 후 활동, 성인기 주간활동과 일자리까지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후견, 재산관리, 주거지원, 사법적 권리보호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2,760명으로 늘리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24시간형 제공기관을 40개소로 확대합니다. '피터팬 아빠'로 알려진 고 전경철 님 사례처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Q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간병비 부담이 큰데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까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준비 중인데요, 지금은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를 본인 부담 30% 내외의 적정 부담으로 낮추고 양질의 간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시범사업을 추진해 간병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Q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 외에 개선 과제가 있다면요?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도록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 대한 급여액을 38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부부가구 대상 감액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30% 이하인 부부의 경우 급여액이 매달 12만4천 원 늘어나게 됩니다. 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위 70%라는 선정 기준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이 필요하지만, 1천만 노인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Q 국민연금의 경우 청년층의 불신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모수개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더욱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분들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지원(크레딧)도 확대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Q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구조가 개편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6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연간 3조6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역 우대 수가를 지급하고,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 지원을 강화하며, 회복기 재활 등 재활치료 보상도 강화합니다. 심층진찰·입원 등 필수적인 기본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수술·마취 등 응급 최종치료와 모자·소아 의료를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인하 등 연간 2조6천억 원 규모의 지출 효율화도 병행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려 합니다.

“총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도 지원합니다. 특별회계 안에 새롭게 편성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의료문제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총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도 지원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특별회계 안에 새롭게 편성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 사업은 대부분 중앙이 제도를 마련하면 지방은 집행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지역 의료 문제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정착시킬 계획이신가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운영을 차질 없이 시행하려 합니다. 다만 이들이 양성돼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인력 대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규제를 개선해 병원 간 순환 당직이나 파트타임 채용, 인력 파견 등 유연한 인력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을 확대해 당장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관련 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수가를 높여 더 많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는 국민의 불안이 큰 사안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상황별·중증도별·질환별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각 지역 의료자원의 분포와 진료 역량을 파악해 지역에 맞는 이송지침을 만들어 상황에 따라 바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해 광역 상황실이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3~5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송 지연 문제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사망자가 9.1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고 현장 체류시간도 광주의 경우 17분 30초에서 16분 6초로 줄었습니다. 9월 전국 16개 시도의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했으며, 지침 정비를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Q 사회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큽니다. AI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지난 8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해 의료취약지, 지역 보건소, 공공병원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19 구급대와 병원을 연결하는 '응급 이송 AI 플랫폼'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이송·수용 여부가 병원과 구급대 간에 공유돼 이송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72개 공공병원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에 연결하면 의무기록 자동 작성, 의료영상 AI 판독 보조 등 AI 기반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두 사업에 대한 지역실증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보건의료 AX를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료 AX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의료서비스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 제약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투자 부족으로 인한 기술이전 위주의 수출구조, 벤처 기술의 완제품 수출 이행 단절과 같은 한계도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고 의료서비스 혁신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과 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R&D 로드맵(2026~2030)'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AI 기반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려 합니다. 이외에도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내년까지 조성하고, 혁신신약 글로벌 진출 지원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합니다.

Q 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장관님이 그리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 나아가 모든 국민이 계속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생명존중 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자살 예방입니다. OECD 1위 수준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10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최근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자살자 수가 감소하고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는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 8.1% 줄어든 만큼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어디에 살든 의료와 돌봄의 기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정리 **양은주** 『나라경제』 편집장

Issue

돈값이 비싸진다, 다시 고금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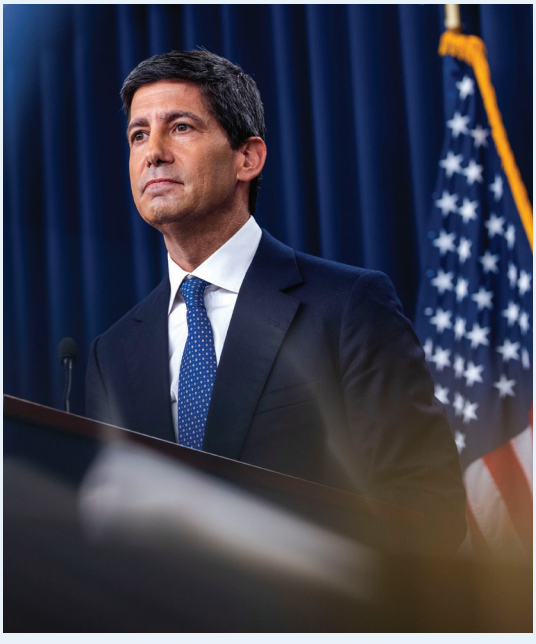
지난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하며 기존의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5.3%를 돌파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웠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달여 만에 5%를 하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다시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AI 투자 확대 우려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청구서'가 주식·채권·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부동산 등 실물경제와 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살펴봤다.

다시 찾아온 글로벌 '긴축의 시대'

정채희
한경비즈니스 기자
poof34@hankyung.com

지난 9월 16일 미국 워싱턴 D.C. 연준 청사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약 3년 만에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p 인상하며 연내 추가 인상 스위치를 켰다. 한국, 일본, 유럽, 인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의 고삐를 조이면서 전 세계는 다시 '긴축의 시대'로 돌입했다.

글로벌 주요국의 긴축 속도전엔 거침이 없다. 지난 9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 대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BOJ) 역시 단기 정책금리를 1.25%로 올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흥국 거대 공룡인 인도중앙은행(RBI) 또한 10월 기준금리를 5.50%로 0.25%p 올려 3년 8개월 만에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13일 IMF 연차총회에서 "AI 호황이 고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며, "물가 목표치(2%) 수렴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8월 연속 인상으로 연 3.00%를 만든 데 이어 추가 인상 여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해 성장을 장려하라"고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바통을 이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역시 저금리 선호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판도를 뒤집은 결정적 계기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다. 에너지값 상승이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치솟으며 금리 인하 명분을 소멸시켰다. 여기에 'AI 업사이클'이란 거대한 힘이 결합했다. 몇몇 FOMC 위원들은 에너지시장 혼란과 AI 관련 수요에서 비롯된 부문별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긴축 전환의 파급효과는 이미 자산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국채시장이다. 최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5.36%, 30년물은 5.73%까지 치솟으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증시 주요 지수도 타격을 입었다. AI 생산성 혁명에 대한 기대감과 빅테크들의 막강한 실적 방어력에 고금리 악재를 버텨내고 있지만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

실물경제와 대체자산시장은 고통스러운 시험대를 피하지 못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며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재무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신용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 역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과 높은 변동성 속에서 옥석 가리기 국면에 노출돼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가를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다. 미국 9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기존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인플레 압력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확대됐다. 다만 미 연준의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상 속도가 조절되더라도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곡점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린다. 국가부채 누적, 기후변화 대응 비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화 투자,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구조적 변수들이 글로벌 금리의 하단을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시장의 숨고르기 속에서도 비싸진 돈값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가계와 기업, 통화 당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 기준금리 4% 시대… 대출금리 0.5%p 오르면 추가 이자 6조5천억 원

2026년 치솟는 미국 국채금리

자료: 인베스팅닷컴, 2026.10

미 국채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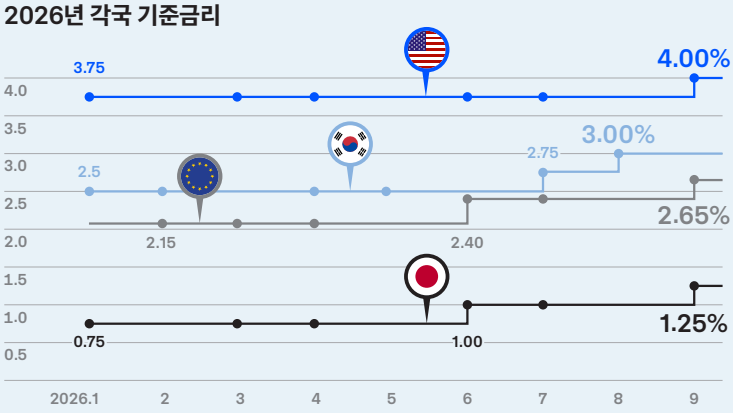
중동전쟁발 유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60.0%**
미 재정적자 심화 및 국채 발행량 증가	33.7
AI 투자 관련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채 수요 약화	4.8
수익률에 민감한 민간투자자 중심으로 국채 보유 구조 개편	1.1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우려사항

국내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기업 이자 부담 가중	**56.5%**
원화 가치 변화 및 환율 변동성 확대	25.8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따른 국내 증시 타격	14.2
부동산PF 부실 위험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정성 증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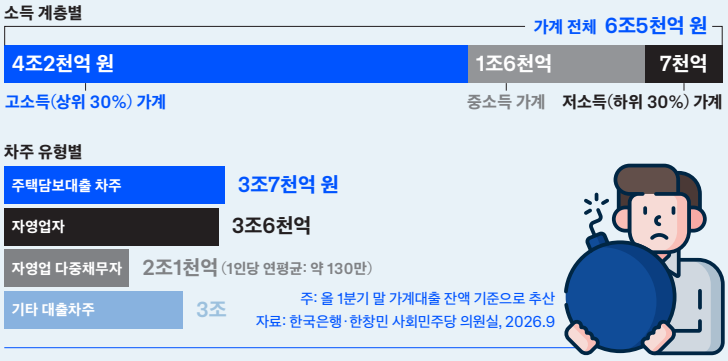
주: KDI 경제전문가 패널(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 등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23일 온라인 조사
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6

2026년 각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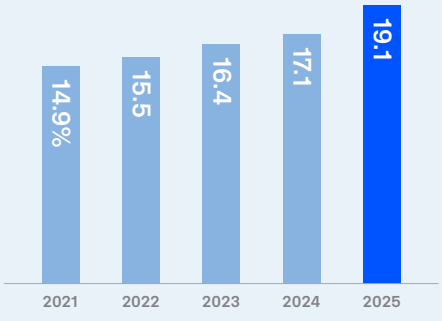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2026.9

대출금리 0.5%p 상승 시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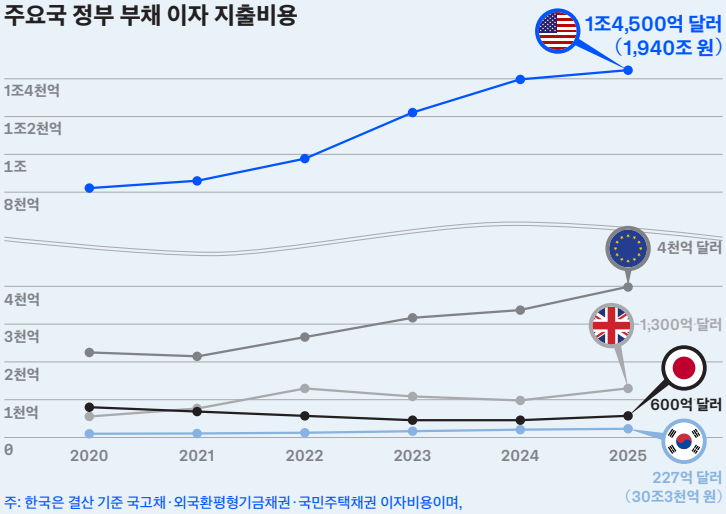
주: 올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추산
자료: 한국은행·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2026.9

한계기업 비중



주: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해 더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을 말하며, 통상 회사가 3년 연속 영업 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2026.9

주요국 정부 부채 이자 지출비용



주: 한국은 결산 기준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민주택채권 이자비용이며, 지난 10월 8일 환율(1달러=1,337원) 기준으로 환산
자료: 『파이낸셜타임스』·국회예산정책처, 2026.9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최근에 오른 기준금리, 내 통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sangyupchoi@yonsei.ac.kr

금리는 흔히 돈의 가격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는 시간의 가격이다. 쉽게 말해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대가가 예금금리이고, 내일의 소득을 오늘 앞당겨 쓰는 비용이 대출금리다. 고대 사회에서도 곡식이나 은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난 뒤 빌려준 대가로 더 많은 양을 돌려받는 관행이 있었다. 그만큼 금리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고민해 온 생활경제의 핵심 변수다.

그중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우리 생활경제의 출발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함께 움직인다.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 부동산 가격, 소비 여력에 영향을 준다. 금리는 멀리 있는 금융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와 앞으로의 주거 선택을 바꾸는 생활 변수다.

최근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오랜 기간 이어지고,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투자 회복에 따라 경기 흐름이 견조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를 낮게 두면 단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물가와 부채, 자산가격 불안을 키워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이러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선택이다.

다만 한국의 금리는 한국경제 여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를 중심으로 깊게 연결돼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전 세계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압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외국인 자금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국내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미 연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확대와 함께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 때문이며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가계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영향은 대출에서 먼저 나타난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보유한 가계는 기준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같은 소득이라도 이자 지출이 늘면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특히 부동산 구입을 위해 많은 대출금을 보유한 가계는 현금 흐름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

부동산시장도 금리에 민감하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기 쉽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가 둔화된다. 집값은 공급, 입지, 정책 등의 영향을 받지만, 금리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이다. 같은 집이라도 금리가 높아지면 감당 가능한 가격은 낮아진다.

고금리 시대의 대응은 금리의 방향을 맞추는 데만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리가 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그 변화가 가계의 소비, 부동산 가격, 환율을 통해 어떻게 생활경제로 전달되는지 이해하는 일이다. 가계는 자산가격 상승 기대보다 상환능력을 먼저 봐야 하고, 정책당국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경기 둔화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 특히 기준금리는 경제의 속도조절 장치다. 고금리 시대의 첫 번째 대응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의 대출 홍보물 앞 풍경.
ⓒ 연합뉴스

금리 인상이 꼭 주가 하락을 의미하진 않는 이유

김효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kim.hyo-jin@shinyoung.com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지난 9월 미국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도 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가 따라 오르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 주가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 주가가 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금리 인상은 오른 물가에 대한 대응이면서 물가가 오를 만큼 경제가 받쳐 준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주가의 반응을 가르는 것은 결국 금리가 왜 오르느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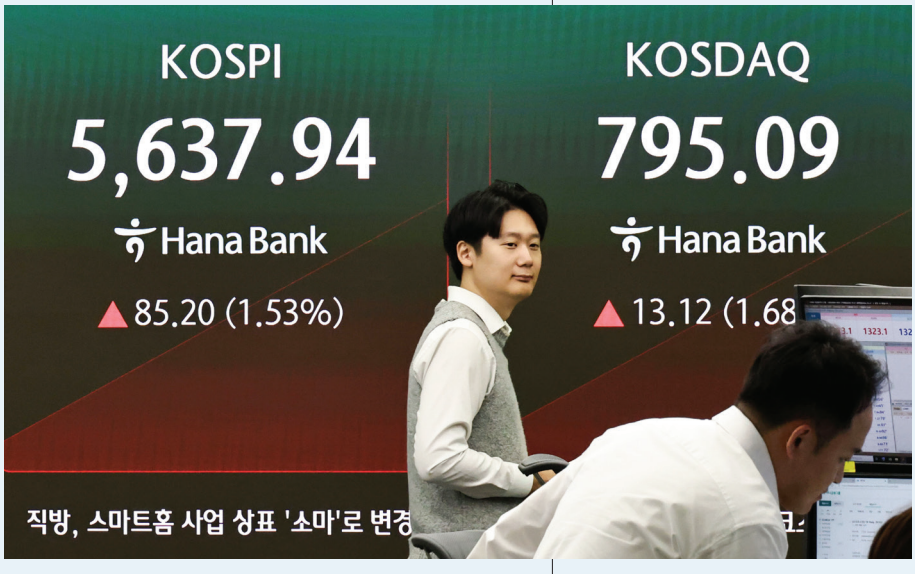
과거 사례도 이를 보여 준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 가운데 처음 금리를 올렸을 때로부터 1년 뒤 S&P500 지수가 금리 인상 전보다 낮았던 것은 2022년이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연준은 9%가 넘는 물가를 잡기 위해 1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1차례 인상해 0.25%에서 5.25%p를 올렸다. 가파른 인상이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던 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업 이익 전망도 함께 꺾였다. 반면 2004년과 2015년 인상기에는 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초반의 흔들림을 딛고 다시 올랐다. 이처럼 주가를 가른 것은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딛고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26년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여러 요인이 섞여 있다. AI 인프라 투자가 이끄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미국·이란 등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명목성장률은 5% 안팎이고, 기업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 9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2주 뒤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시장이 금리 인상과 함께 그 뒤의 성장을 읽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기업의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우선 금리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부채 부담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크게 높아졌다. 세계 곳곳의 전쟁은 휴전과 종전을 바라는 기대와 달리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빅테크가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채와 자금 수요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2010년대 이후 오랜 저금리에 길들여져 왔다. 이제는 금리의 기준점을 한 단계 높여 잡아야 할 때다.

주가 측면에서 금리 상승은 절벽보다 부식제에 가깝다. 한 번에 무너뜨리기보다 천천히 갉아먹는다. 국채금리가 5% 안팎에 머물면 그 이상의 이익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소수 기업에만 돈이 몰리며, 지수는 올라도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기업 이익 증가와 금리 상승의 속도 차이다. 기업 이익이 금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에는 주가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AI 투자 대비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 부담까지 이어진다면, 금리는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바뀐 것은 금리와 주가의 관계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이유다. 성장 없이 금리만 남을 때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악재라는 오래된 공식이 다시 작동한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된 코스피, 코스닥 지수. ⓒ 연합뉴스



미 국채 10년물 금리 6%에 이를 수도… 물가와 매수세가 변수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채권분석부 부전문위원
hwjoo@kcif.or.kr

최근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5%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9일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5.24%, 30년물은 5.60%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는 투자자들의 손절매(loss cut)가 이어질 경우 10년물 금리가 6%에 이를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반면 고용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지난 9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분은 2만 9천 개로, 8월 증가분인 13만3천 개의 약 5분의 1에 그쳤다.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한 연준도 추가 인상에는 신중해질 법한 수치다. 그런데도 장기금리는 왜 높은 수준에 머물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지만, 장기금리는 채권시장에서 결정된다. 장기금리는 오늘의 경기보다 더 먼 미래를 본다.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앞으로의 평균 단기금리를 예상하고, 금리와 물가가 예상과 달라질 위험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 이 추가 보상이 '기간 프리미엄'이다. 30년물은 더 먼 미래의 물가 수준과 재정적자 및 부채 누적 우려 등 재정 불확실성까지 반영한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져도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한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있다. 지난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올라 연준 목표인 2%를 웃돌았다. 추가 인상을 멈추더라도 높은 기준금리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예상은 장기금리에도 반영된다.

돈을 빌리려는 수요도 금리를 떠받친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고 기업은 AI 등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야 한다. 특히 최근 AI 경쟁에 나선 대형 기업들은 금리가 높아져도 투자를 쉽게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일 투자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027년 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로 낮아져도 10년물 금리가 4.7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 안정이 곧 저금리 복귀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높은 장기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으로 이어진다. 집을 사고 공장을 짓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지난 10월 8일 발표된 미국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간 평균 7.4%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같은 돈을 빌려도 매달 더 많은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한국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달러채 발행금리는 미 국채금리에 신용위험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채금리가 오른 만큼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할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기존 고정금리 차입자는 당장은 영향이 작겠지만 만기가 돌아와 차환에 나설 때는 고금리를 체감할 것이다. 높은 금리가 오래갈수록 늘어난 이자 부담을 떠안는 차입자도 많아진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주가에 부담을 준다.

물론 금리가 끝없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상승 압력이 줄고, 높아진 채권 수익률에 끌린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에는 견조한 수요가 몰렸다. 결국 중요한 것은 5%라는 숫자보다 그 지속 기간이다. 미래를 빌리는 비용이 얼마나 오래 높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오늘의 소비와 투자도 달라진다.

지난 9월 4일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1474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진은 같은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 연합뉴스

금리 인상 선반영한 비트코인 가격… 미 연방정부 매입은 아직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
minseung.kim@miraeasset.com

지난 8월 19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 연합뉴스

지난 9월 미 연준이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렸다. 비트코인은 금리에 예민한 위험자산이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다. 왜일까.

정작 금리 인상이 발표된 날 비트코인은 반응하지 않았다. 발표 직전 금리선물시장이 예상한 인상 확률은 92%였고,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전후 7만5천 달러대에 머물렀다. 악재는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었다.

가격이 움직인 날은 따로 있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시작한 8월 28일이다. 이날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경고하자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35%에서 60% 안팎으로 뛰었다. 금리 기대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하루 새 0.14%p 올랐다. S&P500 지수가 0.2% 내리는 동안 비트코인은 3% 넘게 빠졌고, 9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던 현물 ETF도 순유출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뒤의 가격 상승은 어디서 왔을까.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 직후인 지난 9월 17일 7만6천 달러대에서 21일 장중 8만7천 달러까지 올랐다. 그날 하루 현물 ETF에 9억9,900만 달러가 유입됐고, 한 시간 동안 강제 청산된 물량의 96%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었다. 금리라는 악재가 이미 가격에 들어간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금리가 아닌 수급에서 나왔다.

비트코인 가격은 FOMC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그 폭도 주가지수보다 크다. 금리는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여러 재료 가운데 하나지만, 이 재료는 결정이 나온 날보다 기대치가 변하는 날 가격에 빠르게 반영된다.

9월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 18명 중 16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이미 예고된 인상이니 이번처럼 발표 전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모종의 사건이 터져 금리 인상 기대가 갑자기 높아지면 그때 가격이 움직인다. 9월 둘째 주가 그랬다. 9월 5일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타격한 뒤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10일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오르자, 물가 우려에 금리 인상 확률은 76%로 올랐고 2년물 금리는 0.13%p 뛰었다. 비트코인은 7만7천 달러대로 밀렸다.

금리 말고도 값을 미리 매기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의 최대 호재는 미 연방정부의 매수 개시라고 주장해 왔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현물 ETF 자금은 잭슨홀 당일처럼 금리 기대가 바뀌면 빠져나간다. 그러나 정부는 전략자산인 비트코인을 금리에 따라 사고팔지 않는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전략 비트코인 비축(SBR)'이 추진된 데 이어,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RMA)'이 지난 9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가진 비트코인을 20년 동안 팔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매수를 바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예산중립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팔지 않으면 시장에 나올 물량이 줄고, 사기 시작하면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언제 얼마나 살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 가격에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비트코인 매수로 이어질지는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ARMA는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양당의 의견이 나뉜 만큼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행정명령에 따른 비축 근거는 남아도 연방정부의 매수는 멀어질 수 있다.

금리 기대에 예민한 비트코인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금리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사고 장기 보유하는 매수자다. ARMA가 의회를 통과하고 매입으로까지 이어지면 미 연방정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도 비슷한 방식의 매수에 나설 근거가 생긴다.

AI 호황에 가려진 기업들의 신용위험 늘고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ytjeong0815@ibks.com

최근 가파르게 오른 금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지만 관심은 온통 AI에 관한 이야기에 있다.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금리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원인 분석에서부터 고금리가 AI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경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향후 우려까지 존재한다. 금융시장 투자자, 경제활동 참여자 등의 관심은 AI 업황이나 기업들에 모아진 듯하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질수록 더 관심을 둬야 할 곳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비껴나 있는 부분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나 고통, 위험은 일률적이기보다 경제주체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번 경기 국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고 신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경기 사이클의 특징은 투자가 경기를 이끈다는 점이다. 미국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자가 경기 확장을 이끄는 가운데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서 노동보다는 자본과 생산성의 비중이 증가하게 됐는데, 이는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들이 이익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자본 투자가 AI 관련 기업들로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속성이나 향후 자금 상황에 대한 의문 등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단기간에 신용위험을 촉발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해당 기업들에 머물고 있고 주요 정부들의 투자도 집중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용위기의 싹은 AI 기업들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지고 있다. 자본 유치를 독점한 AI 기업들이 이익도 독점함에 따라 AI 성장과 관련 없는 기업들은 소외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AI 기업들이 외부자금 조달 경로까지 독식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미국경제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미국기업의 파산 건수는 소리 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타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바로 사모신용 부실 문제다. 이 문제가 표면화된 계기는 지난해 9월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와 부품거래 회사의 연쇄 부도였으며, 현재까지도 진행형이고 고금리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업황과 이익의 양극화가 심화돼 소외된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실적은 AI 투자의 호황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성장에 대한 기여와 과실이 일부 기업들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AI 및 수출에 연관된 몇몇 산업을 제외하면 3%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기여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리도 같이 올려놓았다. 어느덧 4%대 중반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시장금리(10년물 국채)는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미 우리나라 중소기업 연체율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소리 없는 파산도 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로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3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양극화로 이익 소외 기간이 길어진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 수요는 느는데 조달 경로는 좁아진다면 기업들의 상황은 당연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AI나 반도체에 쏠려 있지만 이들의 화려한 모습에 가려져 있는 기업들에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7월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기업고객 상담 창구. ⓒ 연합뉴스

MASTERPIECES
ACROSS THE COUNTRY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보물

국보 展
순회전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2026.9.2.~11.29.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주최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관·협력 | 국립대구박물관·성주군

K인사이트 KDI 연구위원들이 복잡한 경제·사회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만나보세요.

플랫폼 경쟁법 집행, 적시성과 정확성 사이

양용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yangyh@kdi.re.kr

경쟁법 집행에서 고도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플랫폼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삶에 파고든 지도 어느덧 이삼십 년이 됐다. 경제적 비중이 커진 만큼 플랫폼기업에 의한 반경쟁적 행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 규율 사례만 해도 경쟁자의 부동산 중개사업 방해, 택시 운송 중개사업 방해, 운영체제와 앱 끼워팔기, 배달앱 기업결합 등 다양하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 경쟁 저해, 반경쟁적인 앱 수수료정책 등 다양한 규율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플랫폼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적시성이다.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수년 이상, 때로는 십 년 이상 걸린 탓에 그사이 유망했던 경쟁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작용으로 플랫폼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신속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U의 「디지털시장법」,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이 그 예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도 큰 범주에서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적시성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확성을 크게 희생하면 플랫폼기업의 새로운 시도가 번번이 좌절될 수 있다. 이는 플랫폼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기업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쟁점도 한몫하고 있는데, 유수의 플랫폼기업이 대부분 미국기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EU가 「디지털시장법」에 의거해 지정한 게이트키퍼 플랫폼(플랫폼 이용기업과 최종소비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기업) 7개 중 5개가 미국기업이었다. 다만 이는 이 글의 논점을 벗어난 것이므로 다음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플랫폼 시대, 경쟁기업의 기회는 더 빨리 사라지는데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효과 입증에는 긴 시간이 소요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면 방향성은 분명하다. 규율의 적시성을 높이면서도 정확성을 최소한으로 희생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표현으로는 규율의 적시성을 높임으로써 혁신이 촉진되는 한계혁신효과가 규율의 정확성을 희생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되는 정반대의 한계혁신효과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현실의 문제는 교과서처럼 간단하지 않다. 정책도구가 여러 가지이고 각 정책도구의 효과는 서로 얽혀 있으며 시장의 반응에 민감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가 어디서 심화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쟁법 집행에서 고도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플랫폼기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예컨대 메신저 끼워팔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통신부품 로열티 리베이트 등의 사건에서도 수년이 소요됐다.

플랫폼 시대에 달라진 것은 시장의 변화가 빨라 규율에 과거와 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쟁기업의 기회가 더 빨리 사라질뿐더러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규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작은 기업은 반경쟁적 행위의 피해자가 되면 경쟁법 집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데만도 힘에 부쳐 혁신에 힘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플랫폼 시대에는 힘겹게 버티는 사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와 배달의민족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한 지난 9월 2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 연합뉴스

관련 시장 획정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의 획정이 수반돼야 한다. 관련 시장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거래공간이다. 경쟁 관계는 수요대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품 간의 수요대체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 왔다. 문제는 기존의 기준으로 플랫폼의 경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의된 기준이 없기에 시장 획정의 논리를 탄탄히 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회복 어려운 피해 막기 위해 예비적 금지명령 도입하고 경쟁효과 입증 중심으로 시장 획정 개선해야

플랫폼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쟁당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많지만, 이 글에서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플랫폼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비교적 빠르게 제지할 수 있는 예비적 금지명령 도입과 집행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획정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예비명령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클 수 있다. 따라서 예비명령이 발효되는 여러 방식 중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즉 시장의 변화가 빠른 경우, 중지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 행위를 모두 중지시키는 대신 특정 경쟁자에 대한 행위만 중지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앱스토어의 정책 변경이 앱스토어 운영사와 경쟁사 간의 경쟁조건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쟁사에 대해서는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비명령을 낼 수 있다. 경쟁당국이 의결하는 방식, 경쟁당국이 법원에 예비명령을 구하는 방식, 경쟁자가 직접 법원에 예비명령을 구하는 방식 중에 적절한 방식을 택해야 하며, 모두 도입하되 장단점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차등화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시장 획정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미리 시장을 특정 방법으로 획정해 두거나 피규제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법은 경쟁효과의 입증을 중심에 두고 시장 획정은 이를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시장 획정을 먼저 한 후 그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피는데, 이는 시장 획정 기준이 비교적 정립돼 있는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유용하나 플랫폼 경제에서는 소모적이다. 시장이 여러 방법으로 획정될 수 있다면, 특정한 시장 획정 방법의 시비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입증되고 시장을 달리 획정하면 경쟁촉진효과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비교형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라는 점이다.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장벽을 낮출 겁니다”

코넥트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의 여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ID 하나로 이동, 의료, 법률, 비자, 주거 같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라비 샨카르 판디트
코넥트 대표

2021년 인도 청년 라비 샨카르 판디트(Ravi Shankar Pandit)는 유학할 대학원을 찾고 있었다. 목표는 미국 하버드나 스탠퍼드였다. 그러다 친구 소개로 한국의 KDI국제정책대학원(이하 KDI대학원)을 알게 됐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수진 이력을 하나씩 살펴봤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박사가 줄줄이 나왔다. “굳이 그 학교들에 갈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한 교수님들께 한꺼번에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종으로 왔다. 5년 뒤 그는 대전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코넥트(Konnect)의 대표가 됐다.

이동·주거 등 한국 내 서비스 이용 돕는 플랫폼 개발… ‘여행의 구글’을 목표로 인도·일본 등으로 진출 예정

판디트 대표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10여 개국을 옮겨 다니며 자랐다. 인도에서는 10년 가까이 인도 프리미어리그(IPL) 같은 대형 스포츠 리그의 마케팅을 했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꾸린 올림픽 태스크포스에서 인도 국가체육정책 권고안을 같이 작성하기도 했다. 일본 쓰쿠바대에서 2년간 첫 석사 공부를 한 후 KDI대학원의 공공정책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동기의 절반 가까이가 각국 공무원이었고, 토론식 수업에서 공공 부문의 사고방식을 배웠다. 한국인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다. 사실 창업할 생각은 없었다. 졸업 후 인도로 돌아가 싱크탱크나 정부에서 일할 계획이었다.

계기는 학교 밖에 있었다. “학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교문을 나서면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은행 계좌를 트는 일, 집 구하는 일, 행정 처리 하나하나가 다 벽이었다. 한국 휴대폰 번호와 은행 계좌,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 그는 한국에 산 지 4년이 넘도록 쿠팡도, 배달의민족도, 카카오택시도 써보지 못했다. “쓰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알아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포기한 거죠.” 그는 이 문제가 한국만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낯선 나라에 가면 일주일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누구나 같은 처지가 된다. 그가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온 30여 년 동안 왜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코넥트는 그 질문에서 출발했다.

2022년 한국어 선생님이 알려준 대전시 창업경진대회에 나갔다. 외국인끼리 공공 체육시설을 찾아 함께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티 앱으로 1등을 했다.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스타트업 대표가 될 수 있겠다고 처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창업 관련 비자를 받으려면 교육 이수와 특허 출원으로 점수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도 그곳에서 처음 알았다. 그는 2024년 3월 법인을 세웠다. 외국인이 겪는 불편이 체육시설을 찾고 사용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가 창업한 코넥트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의 여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여권이다. 어느 나라 여행자든 반드시 가진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면 두 정보를 대조해 코넥트 ID를 만든다. 여권 진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이 ID 하나로 이동, 의료, 법률, 비자, 주거 같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택시 앱이나 배달 앱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작동하는 한국 서비스 위에 외국인용 길을 내는 방식이다. 지금은 한국의 모빌리티 회사, 통신회사와 유료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의료와 법률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의료·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외국어를 하는 의사와 변호사가 많다고 했다. “인재는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을 뿐이죠.”

여행 정보 검색도 같은 흐름에 있다. 코넥트는 자체 검색 시스템으로 외국인에게 필요한 한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내년부터는 검색 결과에서 바로 예약까지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지방에 공을 들인다. 외국인들이 서울 말고 한국의 멋진 지방 도시에 많이 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외국인들도 서울, 부산, 제주는 압니다. 대신 왜 대전에, 충주에, 대구에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광명시, 대전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코넥트 웹서

비스에는 8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 최근 두세 달 사이에만 5만~6만 명이 찾았다. 한 달 전 안드로이드 앱을 내놨고 아이폰 앱은 올 11월 말 출시 예정이다. 그의 목표는 코넥트를 '여행의 구글'로 키우는 것이다. 한국에서 모델을 다듬은 뒤 같은 문제를 가진 일본과 인도로 영역을 넓힐 생각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우승이 투자 유치로 이어져…
외국인 창업자는 늘지만 한국 정착은 적어 그 틈 메울 것

이런 서비스에 투자자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다. 챗GPT 같은 프런티어 AI가 좋아지면 하루아침에 쓸려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더 나은 서비스가 나와서 삶이 편해진다면 기꺼이 코넥트를 닫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AI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답을 줄 수 있지만 택시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현지 파트너와 믿을 만한 서비스망은 사람이 발로 뛰어 만드는 것이지 코딩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창업 후 투자 유치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기는 쉽지 않다. 한국어로 지원서를 써도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다.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알게 됐다. 2024년에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데 그쳤지만, 2025년 2,625개 팀 가운데 1등을 차지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전환점으로 꼽았다. 우승 이후 여러 투자자 앞에서 거듭 발표할 기회가 생겼고, 정부 프로그램에 뽑혔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증이 됐다. "거절당할 때마다 발표 자료를 고쳤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제품보다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버티는지를 봅니다." 씨엔티테크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시드) 투자를 받았고, 지난 9월 인도계 창업자로는 처음으로 팁스(TIPS)에 선정됐다. 석 달 전 처음 만났을 때 팁스에 선정될 수 있을지 걱정하던 그였는데, 그 사이 직원은 2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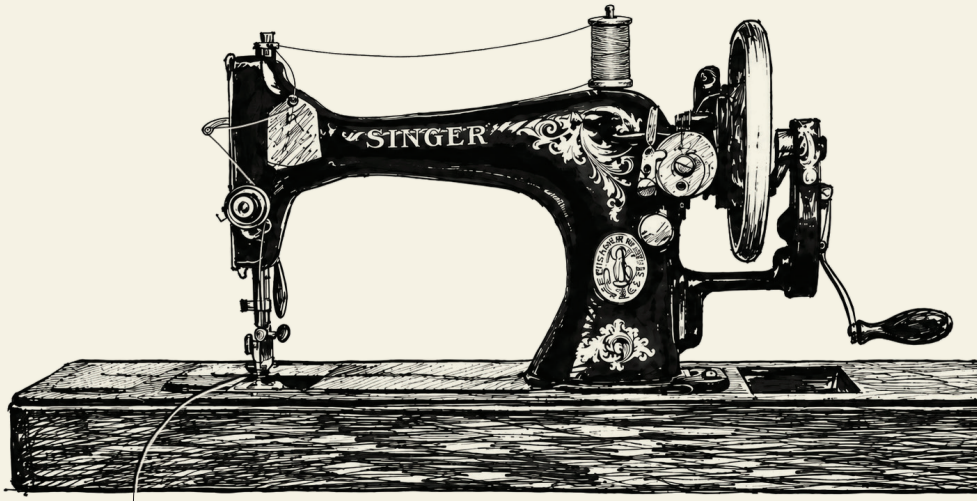
그는 다른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국에 지원 제도는 많지만 정작 외국인 창업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서비스 등이 만들어져 실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창업자가 만든 회사는 한국인 직원을 어디서 뽑아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했다. 코넥트의 첫 디자이너는 구글 번역기로 채용 공고를 써서 겨우 구했다. 그나마 2주마다 영어로 네트워킹 행사가 열리는 서울 역삼동의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가 큰 힘이 됐다. 그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외국인 창업자와 한국인을 만날 수 있어서다. 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창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착하는 사람은 적다며 그 틈을 메우는 것도 자신의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영어로 진행되는 창업 행사를 열심히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가 강조한 말이 있다. "세계에 알려진 나라와 정말 글로벌한 환경을 가진 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회사를 외국인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세요. 코넥트는 한국에 등록된 한국 스타트업입니다."

언젠가 K팝과 K뷰티 열풍이 식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찾고 머무는 나라가 되려면 그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KDI대학원에서 공부한 인도 청년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개척하고 있다. 코넥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창업 성공 사례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estima7@gmail.com

쓸모없음의 쓸모

물건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



일 때문에 진주에 내려갔다가 숨은 보석 같은 장소를 찾아냈다. 그동안 나만 몰랐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국내 유일의 '재봉틀 박물관'이 진주에 있었다. 재봉틀에 특별한 관심은 없었는데,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강유등축제의 번잡함을 피해 구경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2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탄성을 내질렀다. 줄지어 세워놓은 재봉틀은 잠든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전 세계 회사 제품이 다 모여 있고, 같은 디자인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각각의 재봉틀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직접 작동해 볼 수도 있었다. 발판을 밟거나 핸들을 돌려서 바늘을 움직일 수 있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장면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바늘이 올라오는 순간 윗실이 천에 붙들려 작은 고리를 만든다. 아래에서 돌던 갈고리가 그 고리를 낚아채 밑실 둘레를 한 바퀴 돌린다. 두 가닥의 실이 천 가운데서 엮인다. 재봉틀이 움직이는 소리가 편안하게 들렸다. 톨, 톨, 톨, 톨 하는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집마다 재봉틀이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있었다. 재봉틀 본체를 꺾어서 아래로 숨기면 책상으로 변신했다. 거기에서 숙제도 했다. 옷이 해지면 어머니는 재봉틀 몸체를 위로 들어올려 바느질을 했다. 어머니가 발판을 밟는 동안 나는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었다. 내 방 같은 것은 없었고, 어디 갈 데도 없던 저녁이면 재봉틀을 돌리던 어머니 옆에서 만화책을 읽곤 했다. 재봉틀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와 감촉과 풍경을 묶어놓은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아마도 해진 옷을 깁거나 이불이나 커튼을 만들면서 가난의 구멍을 메우고 있었을 것이다.

재봉틀이 한국에 들어온 건 1877년이라고 전해진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을 방문했던 김용원이 귀국하면서 재봉틀을 들여왔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은 1905년 '싱어(Singer)' 사의 지점이 서울에 생긴 직후였다. 당시에는 초고가 사치품이었다. 부유층에서도 '월부'를 통해 살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책으로 재봉틀 양산 체제가 만들어졌고, 1970년대에는 '혼수품 목록 1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귀한 재봉틀이었기에 옻칠하고 자개를 박아 안방 한가운데 놓아뒀던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우리 집의 재봉틀 역시 자개 디자인이었다. 서구에서도 가정용 재봉틀에만 화려한 장식을 가미했다. 많은 사람이 집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재봉틀을 보면서 가난하지 않다는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나는 대학에 가서야 일명 '미싱(재봉틀의 일본식 표현)'으로 먹고 사는 봉제 노동자들이 수만 명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락에서 새우잠을 자며 일하던 봉제 노동자들이 졸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도 보았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 '사계'도 그때 처음 들었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라는 가사가 그렇게 슬픈 의미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한때 집안의 화려한 가구였다가 노동자들의 생계 도구였다가 이제는 쓸모가 거의 없어진 재봉틀이 모여 있는 박물관에는 수백 년의 공기가 압축돼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기름 냄새도 떠다니고 있었는데, 아직도 재봉틀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김중혁 소설가
『펭귄뉴스』, 『가짜 팔로 하는 포옹』 작가
popsong7@gmail.com

N Now

천고마비의 계절, 살 안 찌고 날 수 있을까

가을,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배, 감, 전어, 꽃게, 대하, 고구마, 밤….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끈 건 살찌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바람 혹은 맛있는 걸 먹고 찐 살을 빠르게 뺄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일지 모릅니다. 한편에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신체 특성상 비만 극복이 어려운 환자들도 치료제가 필요할 겁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비만치료제 열풍과 부작용, 대체 식품 그리고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당신도 나도 '맞은자로'?

김잔디
연합뉴스 정책사회부 기자
jandi@yna.co.kr

비만치료제가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위고비', '마운자로'라는 특정 상품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온라인에는 위고비, 마운자로를 체중에 상관없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 '성지'로 불리는 병원 정보가 공공연하게 공유된다. 체중 감량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마운자로를 권하거나, 급격히 살이 빠진 사람에게 마운자로 맞았느냐는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됐다.

비만치료제의 인기는 수치로 드러난다.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처방 150만 건을 돌파했다. 약 10개월 앞서 출시된 위고비의 전체 처방 건수를 진즉 뛰어넘었다. 위고비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처방 건수가 약 122만9천 건이다. 비급여 의약품 특성상 실제 처방은 보이는 수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마운자로 처방은 30대 비중이 36.0%로 가장 높고, 40대(27.1%), 20대(16.9%), 50대(14.6%) 순이다. 미성년자 대상 처방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 10대의 마운자로 처방은 출시 당시에는 월 8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1,739건에서 지난 5월 2,59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인에게만 투약하도록 허가돼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범위 외 처방인 '오프라벨'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정상 체중 범위인 여학생의 28.2%, 남학생의 17.6%가 본인을 살찐 편이라고 생각한다. 마운자로가 의학적 필요에 의한 치료제가 아닌 단순한 '살 빼는 약'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 나아가 미성년자에게도 만연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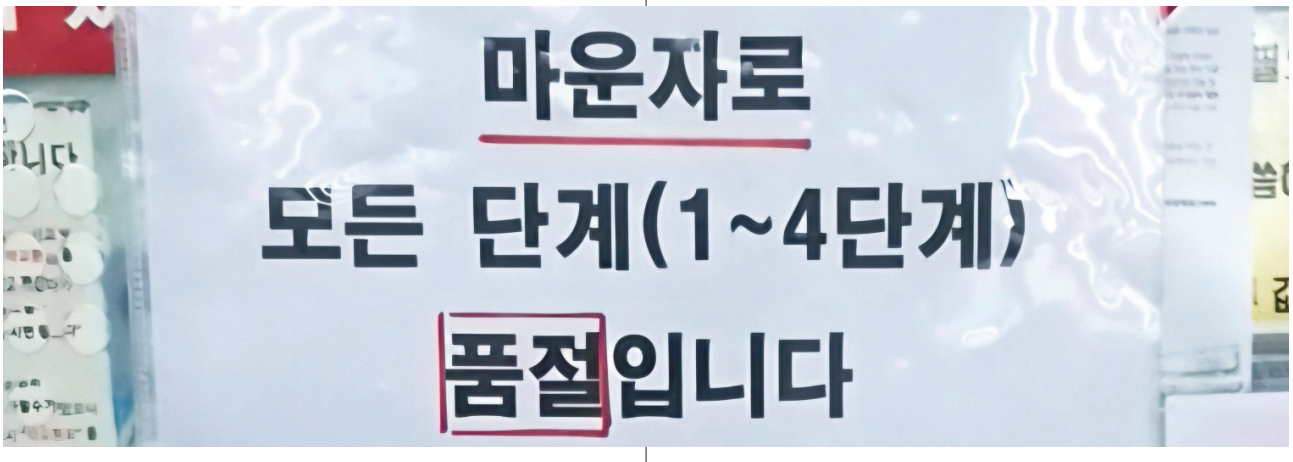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마운자로를 처방하는 병원에 환자별 중복 처방, 용량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역시 무색하다. DUR 경고에도 처방이 변경되지 않은 비율이 90% 이상이다.

비만치료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일본에서 원정 처방을 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스시자로(스시+마운자로)'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밀반입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마운자로는 섭씨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어서 여행 가방 등 적절치 않은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이동 시 약물이 변질될 소지가 있다.

비만치료제 열풍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도 바꾸고 있다. 체중 감량 보조제 시장이 쪼그라들고 헬스장 폐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미용성형의 트렌드가 체중 감량에서 체형 관리 및 노화 방지로 옮겨 가는 모양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위별 관리에 집중하거나, 급속한 감량으로 인한 탄력 저하와 볼륨 꺼짐을 해소하는 행태로 바뀌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실시간 혈당 데이터와 비만치료제 복용 스케줄을 분석하는 앱도 나왔다.

이처럼 비만치료제가 사회 곳곳의 모습을 바꾸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주사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리는 것이다. 비만치료제가 오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손쉽게 체중을 감량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비만치료제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온 지금 마운자로의 허가 사항을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를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하도록 허가했다.

지난 4월 13일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문. ⓒ 연합뉴스



피로, 췌장염, 우울감… 임의로 약물 변경·중단 말고 동네 약국 들러보세요

김형선
약사
khsunny1978@gmail.com

남편은 먹어도 먹어도 더 말라가고, 나는 저녁은 굶고 샐러드만 찾아 먹는데도 살이 찐다. 남들이 보기에 남편은 엄청 힘들게 살고 나는 너무나 편한 인생을 사는 걸로 보인다. 억울하다!

이 억울함이 싫어서 지난 6개월 동안 10kg을 감량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첫 3개월 동안은 매주 한 번씩 마운자로 2.5mg을 투여했고 다음 2개월 동안은 1.5~2주에 한 번씩 투여했다. 그 뒤로는 빠진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마운자로 효과를 찬양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성공담에 가려진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운자로 상자를 열면 의약품 첨부문서와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다. 사용 설명서는 주사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그림 위주의 설명서다. 의약품 첨부문서는 약의 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빽빽하게 적은 설명서다. 이 종이를 실제로 펴서 하나하나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펼치면 신문지 한 장 정도일 텐데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여러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부작용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내가 겪은 부작용은 약을 투약한 뒤 2일 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로와 근육통이었다. 처음에는 감기·몸살인 줄 알았으나, 마운자로는 투여 후 8~72시간이 돼야 체내 농도가 최고치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먹는 날이면 배가 요동치고 급한 설사로 화장실을 뛰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항상 배에 가스가 찬 것처럼 빵빵하고 방귀가 계속 나오고 더부룩함이 느껴졌다. 다행히 나는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사용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목표로 했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수많은 실패와 부작용을 겪는다. '이긴자로'는 본인 몸이 마운자로를 이겨서 결국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날씬한 한 친구는 더 마르고 싶어서 닥터나우를 통해 마운자로를 처방해 줄 병원을 찾아 투여했으나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고, 내게 얼마나 용량을 올려야 하냐고 물었다. 그 친구는 효과 없는 마운자로를 6개월째 투여 중인데 애당초 해당 의약품 적응증(비만 또는 과체중) 대상이 아니므로 의약품 오남용이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적응증에 해당되나 마운자로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고 부작용 호소 없이 두 달간 투여하다가 중단했다. '효과 없음'도 부작용에 해당한다.

"마운자로 투여받고 구토도 심하게 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2~3일 죽다 살아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비만치료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른바 '성지병원'에서 처방받고 그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동네 약국에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들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체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면 동네 약국을 찾아와 호소하곤 한다. 대부분 설사, 소화불량, 피로 등 경미한 증상이라 이를 줄여주는 일반의약품을 추천해 드린다. 때때로 걱정되는 증상도 있다.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나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아 오는 경우다. 마운자로 첨부문서엔 우리가 잘 모르는 자살행동, 자살생각 등의 부작용도 적혀 있다. 단기간의 체중 감소로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얇은 머리 대 날씬한 몸(Thin Hair or Thin Body)'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이외에도 비만치료제로 인한 사망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기사화됐다. 가장 많이 들어본 췌장염 부작용 외에도, 개개인이 지닌 동반질환과 비만치료제 영향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다.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던 미국의 한 여대생은 비만치료제로 인한 구토, 전해질 불균형이 부정맥으로 이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만,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본인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0.001%의 확률로 나타난다는 부작용도 나에게 발생하면 100%다.

"모든 물질은 독이다. 독이 아닌 것은 없다. 오직 용량만이 어떤 물질이 독이 아닌지를 결정한다." 약대 교과서에 나오는 16세기 철학자 파라켈수스의 명언이다. '바디 갓생'이라는 말이 있다. 운동과 체중 관리가 '외모 가꾸기'가 아닌 주체적인 자기 개발이자 자신감 찾기라는 것이다. 과체중이었던 나는 가벼운 몸으로 일상의 활력을 다시 찾았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만치료제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지닌 의약품이다. 의약품을 투여할 때 환자가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변경, 중단, 추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작은 부작용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마음대로 중단하기 전에 동네 약국을 들러 살짝 묻는 게 좋다. 약사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내원을 권유해 줄 수도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약물은 독이 될 수 있지만, 전문가와의 동행은 안전한 완주가 될 수 있다.

<그림> 마운자로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흔하게	흔하지 않게
- 저혈당증(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 시) - 메스꺼움, 설사	- 저혈당증(메트포르민 및 SGLT2 저해제와 병용 시), 식욕 감소 - 복통, 구토,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창, 트림, 고창, 위 식도 역류 질환 - 피로, 주사부위 반응 - 심박수 증가, 리파아제 증가, 아밀라아제 증가	- 저혈당증(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체중 감소 - 담석증, 급성 췌장염 - 혈중 칼시토닌 증가

자료: 약학정보원 자료 재가공

먹은 만큼 살 찌지 않는 과일스무디가 있다?

김태희
과학동아 기자
taehee@donga.com

지난 7월 EU의 신식품 목록에 '하얀 가루'가 등재됐다. 가루의 정체는 '이눌린 프로피오네이트 에스테르(IPE)'.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글래스고대 동위원소 화학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이섬유다. 화학구조를 뜯어보면 다소 어려운 이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PE는 긴 사슬 모양의 당인 이눌린에, 단쇄 지방산인 프로피온산을 에스테르 결합으로 무수히 많이 붙인 물질이다. 에스테르 결합이란 산과 알코올이 반응해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탈수 축합(縮合) 반응을 말한다.

인체에는 이눌린을 분해할 소화 효소가 없어서 IPE를 섭취하면 소장을 통과해 대장에 도착한다. 대장에 가서야 장내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해 이눌린과 프로피온산의 결합을 끊고, 다량의 프로피온산이 폭탄처럼 발생한다. 프로피온산은 이후 장 끝부분에 있는 L세포를 자극한다. L세포는 영양소나 미생물 대사산물을 감지하면 GLP-1과 PYY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해 '배부르다'는 신호를 만들어낸다. IPE를 섭취했을 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다.

공동연구팀은 스무디 등 음료에 타서 섭취할 수 있고 시리얼이나 빵을 만들 때 넣을 수 있도록 흰 가루 형태의 IPE를 개발했다. 개발에는 약 15년이 소요됐으며 약 6년간의 평가를 거쳐 지난해 6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으로부터 규제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IPE를 넣은 음식이라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로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량 때문이다.

IPE 섭취로 증가하는 GLP-1, PYY 호르몬은 체내 정상 분비량의 2~3배 수준이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주사형 비만치료제를 맞는 경우 약 10배 이상의 GLP-1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GLP-1의 경우 본격적으로 체중 감량이나 식욕 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내 정상 분비량의 5배 이상이 분비돼야 한다. 2~3배 수준의 분비량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IPE의 효과는 영양 보충제 수준'이라고 말한다. 브렌던 가브리엘 영국 애버딘대 로웻연구소 교수는 "IPE가 전체적인 체중 관리 전략의 도구 중 하나일 순 있겠지만, IPE 하나로 체중 감량이나 체중 증가 예방에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EFSA의 규제 승인을 받고 EU의 신식품 목록에 등재됐다는 것이 곧 IPE의 효과를 증명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신종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IPE 개발 과정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도 엇갈렸다. 연구 초기였던 2015년, 40~65세의 과체중 중년층 6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됐다. 모든 그룹에서 참가자의 체중이 5%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공동연구팀이 IPE가 "비만이 문제가 되기 전에 체중 증가를 막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 말하는 이유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40세 성인 2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 관리에서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연구팀은 IPE를 1년간 먹으면 젊은 성인의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브리엘 교수는 이를 두고 "IPE를 섭취한 초기에 생리학적 시스템이 적응 반응을 보이고, 이후 식욕 조절 시스템이 IPE에 적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IPE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산업화 법인을 설립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 파트너를 찾는 중이다. 연구팀은 2027년쯤 IPE를 제품화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IPE가 첨가된 음식은 시리얼바와 과일스무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EFSA에서 허가받은 식품이 시리얼바(100g당 최대 17g의 IPE 첨가 가능)와 과일스무디(100ml당 최대 3g의 IPE 첨가 가능) 두 종류이기 때문이다. 살이 찌지 않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이 당장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 치료문턱 낮춰야

장형우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chang.hyoungwoo@gmail.com

나는 고도비만 환자로서 끝없는 고통과 인내에 기대지 않고 비만에서 벗어날 방법을 평생 꿈꿔왔다. 그러나 현실은 체중 감량 실패와 재증가의 반복이었다. 체중을 줄여도 유지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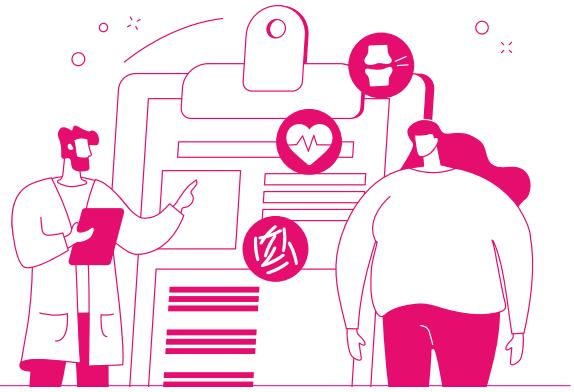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만과 그 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몇 가지 뿌리 깊은 전제가 있었다. 같은 양을 먹으면 누구나 비슷하게 살이 찐다는 생각과 충분히 노력하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고도비만에서 벗어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생각은 비만을 개인의 의지와 생활 습관 문제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러나 체중은 섭취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체중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며, 체중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해 감량에 저항하기도 한다. 비만대사수술로 위의 용적을 크게 줄이거나 음식이 지나가는 경로를 바꾸더라도 감소한 섭취량에 비례해 체중이 줄어들지 않고 상당한 수준에서 방어된다. 비만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먹는지뿐 아니라 몸이 체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체중을 충분히 감량하고 감량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이다. 특히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사람이 BMI 25 미만에 도달해 그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목표다. 그런 성공이 특별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큰 축하를 받는 이유도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학은 이러한 어려움을 환자의 인내심 부족으로 돌리기보다 더 많은 환자에게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비만대사수술 외에는 큰 폭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치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상당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한 약물이 등장했고,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랫동안 감량 실패를 겪어온 환자들에게 이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문제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등장했음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비만치료제는 외모에 관한 관심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고도비만 환자에게는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진료 현장에서는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정상 체중이나 과체중인 사람이 처방을 요구하는 반면, 정작 의사가 치료를 권하는 비만 환자의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투약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렵게 치료를 시작해도 비용 때문에 중단하고, 이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일도 생긴다. 치료의 필요성보다 지불 능력이 접근성을 좌우하는 현실이다.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다. 약물로 체중을 줄였다고 해서 체중을 다시 늘리려는 생리적 작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를 수 있듯 비만 치료제 투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만 치료에 대한 보건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비만이 단순히 생활 습관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이다.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지가 부족하니 노력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비만을 그저 많이 먹어서 몸집이 커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 정도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그 시각 속에서는 비만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쉽게 가려진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 일상적인 이동과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환자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한다.

이 부담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비만과 관련된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의료비와 돌봄 부담도 크다. 건강 악화로 사회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손실도 있다. 비만 치료는 이러한 부담을 줄일 기회다. 적절한 치료로 체중과 대사 건강이 개선되면 여러 동반 질환이 호전될 수 있고, 환자는 일상과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이러한 편익과 장기적인 비용 효과를 함께 평가하며 설계해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비만에 더 취약한지, 왜 몸은 높은 체중을 유지하려 하는지, 왜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지는 앞으로도 밝혀야 할 과제다. 그러나 모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순 없다. 우리는 이미 이전보다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갖게 됐고, 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환자에게 더 오래 참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개인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건강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똑똑한 금융생활

금융시장을 읽는 열쇠, 채권과 금리

지난 9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만기가 3개월 이하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SGOV)'였다. 한 달 전만 해도 스페이스X, 알파벳 등을 가장 많이 샀던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9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10억128만 달러로 7월에 비해 78.4%나 줄었다. 반면 같은 달 미국 채권 순매수 규모는 13억6,263만 달러로 주식을 앞질렀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해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데다,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채권을 쉽게 사고팔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은 여전히 낯설다. 채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이다. 과거 왕국들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발행했을 만큼 역사가 깊은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빌리는지, 이자는 언제 얼마를 줄지를 기록한 증권으로,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 한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 다만 만기 전에 사고팔 수 있어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점은 주식과 닮았다.

시장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만기까지 보유하며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이다. 월별·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사면 월급처럼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정부가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만기 5년 이상)처럼 중간 이자 지급 없이 만기까지 보유해 복리 이자와 세금 혜택을 한 번에 몰아받는 목돈 마련형 상품도 있다. 둘째, 채권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사 모으는 투자자들은 향후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수하는 것이다.

금리가 올랐는데 왜 채권 가격은 낮아질까? 경제부 기자로 일하며 가장 헷갈렸던 문장이 바로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었다. 금리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게 아닌가 싶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이자 3%를 약속한 채권이 나와 유통되는데 이달에 5%짜리 새 채권이 나온다면, 3%짜리 기존 채권은 가격을 깎아줘야 겨우 팔린다. 약속된 이자(표면금리)는 바꿀 수 없으니 가격을 낮춰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면금리만 집중해서 보면 되지만, 매매차익까지 노린다면 시장금리 변동을 함께 따져야 한다.

채권 투자,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같은 채권을 사도 투자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권을 직접 매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만기에 가까워지고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만 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반적인 채권 ETF는 편입 채권을 교체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내 상장 채권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과세 대상이다. 또한 만기가 얼마나 긴 채권인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훨씬 크게 요동치며, 만기 전 중도 매도 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채권을 공부하는 일은 결국 '돈의 가격'인 금리를 이해하는 일이다. 금리는 채권 수익률뿐 아니라 주식 가치,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업의 투자 결정까지 좌우한다. 처음 접하면 난해하지만, 채권과 금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금융시장을 읽는 열쇠를 쥐게 되는 셈이다.

이현 중앙일보 기자
『금융 프렌즈가 우릴 기다려』 저자
lee.hyun@joongang.co.kr

KOREA GRAND FESTIVAL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026. 10. 29.(목) - 11. 15.(일)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자동차부터
가전, 먹거리, 여행·숙박,
쇼핑까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경제정책해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 양자, 공급망 등 미래 신산업 개척 위한 씨앗 뿌린다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최윤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
kihyun3734@korea.kr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개척을 위해 '투자형 R&D(SPC형, 펀드형)'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의 출연방식을 넘어 출자나 투자를 통해 정부가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동시에 신속한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규모와 속도 등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역사적인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선진국들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보고 대규모 투자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난 6월 29일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 다음을 준비하는 선제적 투자로 차세대 먹거리 확보… SMR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로 미래 에너지수요 뒷받침

기술 발전 주기가 빨라지고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선도국들도 AI 그 다음을 내다보고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은 미지의 기술에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금부터 첨단기술의 씨앗을 뿌려 1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폭증하는 AI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미래 청정에너지 SEED(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프론티어 SEED(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미래 개척의 기반이 될 '대도약의 기반 SEED(첨단공급망)'의 세 분야로 구성된다. 각 SEED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 조립이 가능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쉬운 무탄소에너지원이다. 경수형 i-SMR은 2035년 상용화를 위해 2027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다목적인 비경수형 SMR은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030년대 건설 착수 및 글로벌시장 선점을 겨냥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설계의 SMR 인허가체계를 완비하고, SMR 활용에 병목이 되는 법·제도도 발굴·개선해 나간다.

둘째, 핵융합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상에 구현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인공 태양'이라 불리는 꿈의 기술이다.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해 2030년대 말엔 전력 생산을 실증하고,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을 목표로 상용로 건설도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핵융합 안전 규제체계 또한 적기에 마련한다.

셋째, 재생에너지는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초고효율(35% 이상) 태양전지와 우주 데이터센터용 태양전지 개발을 추진한다. 수전해 시스템 국산화 및 50~100MW급 대규모 수전해 실증 등을 통해 청정수소 적기 공급과 철강·석유화학 등 난(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GW급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 국산화와 실증을 추진하고, 초전도 송전망 기술 실증과 함께 AI 기반의 차세대 전력 그리드의 산업화를 가속한다.

넷째, 양자기술은 AI 연산량과 전력 소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분야의 혁신을 촉발할 범용기술이자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양자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양자프로세서(QPU) 원천

지난 10월 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 연합뉴스

기술 확보에 집중해 2029년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QPU를 확보한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역량을 기반으로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파운드리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출자 SPC를 설립하고 양자칩 양산체계를 갖춰 10년 내 제조 역량 1위에 도달하고자 한다.

K퀀텀 파운드리, 한국형 저궤도 위성망 등 독자 기술력 확보하고 범정부 총력 지원체계 구성해 법령·규제도 정비

다섯째, 인류의 활동 영역을 지구 밖으로 넓히기 위해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 2030년 민간 주도의 국내 최초 달 착륙선(700kg급) 발사, 2031년 우주과학탐사선 발사, 2032년 달 착륙선(1,800kg급) 발사를 통해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심우주 탐사 기반을 마련한다.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해 글로벌 6G 통신서비스 선도를 준비한다.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우리 항공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초격차 소재·부품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첨단바이오 기술은 인체 한계 극복과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미래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꾼다. 암 조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암 특화 AI 모델, AI와 로봇이 운영하는 자율실험실, 생명체를 설계·생산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등 AI 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뇌-컴퓨터 통역 AI 등 BCI(Brain-Computer Interface) 원천기술을 개발·실증해 생각만으로 글자 입력과 기계 조작이 가능한 BCI 제품을 2035년까지 상용화한다.

마지막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기술의 기반인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장비의 특정국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생존 필수품목의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가공 역량을 내재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신속히 구축한다. 국내 생산 불가품목은 비축품목과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새만금 비축기지를 2028년까지 가동한다. 역량 강화 필요품목에 대해 앵커기업-협력기업 간 원팀 조성부터 기술개발, 실증,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부총리가 직접 책임지고 챙겨나갈 수 있도록 10월 8일 미래개척기획과를 신설했다. 연내에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프로젝트 추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인 민관 합동 '(가칭)미래개척추진단'으로 확대 구성·운영한다.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규제 등 제도적 장애물도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7대 SEED 프로젝트 관련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약 4조 원(R&D 3조8천억 원, 비R&D 2천억 원)이 편성돼 있으나,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관련 사업 조정 및 신규 반영 등을 협의하며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래 신산업·신시장의 조기 개척을 위해 '투자형 R&D(SPC형, 펀드형)'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의 출연방식을 넘어 출자나 투자를 통해 정부가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동시에 신속한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규모와 속도 등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AI 시대 이후를 책임질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따로 또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해설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터 먹거리, 여행까지…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열린다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유제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syss07@korea.kr

소비는 가장 일상적인 경제활동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매출은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에 활력이 더해지며 지역상권에도 온기가 퍼진다. 특히 소비가 특정 산업·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전반에 확산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렇기에 소비를 촉진하고 그 흐름을 경제 곳곳으로 연결하는 것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다.

4만 개 기업 참여, 10개 정부 부처 행사와 민간 소비 혜택 연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7→10%, 상생소비복권 당첨금도 확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은 분야별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해 왔다. 농축수산물·유통업계의 할인 행사, 중소·소상공인 판촉 행사, 여행·관광 프로모션, 면세점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눈에 그 많은 혜택을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행사의 홍보와 참여가 분산되는 한계도 있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하 코그페)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여러 부처와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소비·할인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 동일한 기간으로 연결해 국민이 한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소비에 참여하게 하고 그 효과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단위의 소비 축제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코그페는 흩어진 소비 행사를 한데 모으는 출발점이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여행·관광과 지역축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대·중소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인 소비 축제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코그페에는 약 4만 개 기업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동행축제'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K-세일페스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한우 할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세일페스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체국쇼핑 할인, 관세청의 면세점 프로모션 등 10개 부처의 행사와 민간의 소비 혜택을 연계했다.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기업에는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비 축제가 실제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혜택이 구체적이고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 코그페는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할인부터 카드 혜택까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농축산물은 배추·무·마늘 등 김장재료를 포함한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75개 매장에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우 역시 대형 유통사를 통해 최대 40% 할인하고, 수산물도 온·오프라인 행사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우체국쇼핑 지역 특산물 할인, 비수도권 숙박과 섬 관광 활성화 숙박 쿠폰 8만4천 장 배포,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면세점 할인 등 여행과 문화생활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자동차·가전·패션·식품·생필품 등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공산품 할인 행사도 전국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상권에서 활용 가능한 혜택과 이벤트도 확대한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평시 7%에서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를 20만 원 추가해 11월 한 달 최대 1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우리·삼성·현대·KB국민

지난해 10월 2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등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백년가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청구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복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상생소비복권은 소비에 재미를 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장치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만 원 단위로 복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총 5,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천만 원이던 1등 당첨금을 올해 3천만 원(10명)으로 늘리는 등 총 17억 원 규모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당첨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그 혜택이 다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지역대표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묶어 상권 활성화하고 안동·경주·문경 등 지역 백년가게 투어패스 시범운영

올해 코그페는 여행과 관광을 지역 소비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 테마다. 할인 혜택만으로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머물고 지역상권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대표 점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하나의 소비 동선으로 묶어 지역에 머물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점포 연계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점포를 방문한 내·외국인 소비자가 인근 전통시장과 상점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할인·환급 혜택을 연계했다. 대전의 성심당과 문창전통시장, 부산의 삼진어묵과 자갈치시장, 광주의 양동통닭과 양동시장, 인천의 스쿨뮤직과 구월모래내시장 등 전국 15개의 지역대표 점포와 주변 상권을 연결해 핵점포 방문이 주변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지역상권에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핵점포 할인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해 핵점포 방문 → 주변 상권 이동 → 추가 소비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방한 외국인 또한 중요한 소비 주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대형 유통 매장과 면세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으로 확산된다면 관광은 지역상권에 새로운 소비 수요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 방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코그페 기간 동안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다국어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지역상권 방문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10월 31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코그페 개막 행사 또한 지역상권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소비 축제로 개최했다. 안동의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개막식과 연계한 팔도관광열차를 통해 수도권 등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했다.

안동·경주·문경 등 지역의 백년가게를 방문하는 투어패스를 시범운영하고 개막 행사를 K팝 상생 콘서트와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먹고 즐기고 머무는 하나의 지역 소비 모델로 구축했다.

코그페가 국민 모두의 소비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에 공공기관·기업·개인이 참여하는 '모두의 소비 캠페인'을 추진한다. 부처 장차관의 소비 현장 행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 기업 대표·임직원, 국민이 일상에서 소비활동에 참여하고 각자의 홍보 채널에 인증하는 릴레이를 통해 전국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소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여행지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역의 상품을 고르는 일상의 선택이 모여 경제의 흐름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한 번의 구매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상인, 지역의 활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코그페는 1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남은 기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상권이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그페가 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지금 이 순간 소비에 참여하는 국민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다.

경제정책해설 금융위원회

중저신용 대출 우수 업체에 투자한도 상향 등 혜택 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
csi76@korea.kr

이번 방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외형적 성장을 넘어 금융혁신이 실제 자금공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은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상환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넓힐 수 있고,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이 경제의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돼야 한다. 특히 신용도가 다소 낮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포용금융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체계만으로는 다양한 차주의 상환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고 금융소외계층에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는 대안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중금리대출 확대 위해 도입된 온투업, 신용대출 비중 11%에 그쳐… 우수 업체 자체 투자한도 40%로, 일반투자자 한도 5천으로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고, 낮은 운영비용과 혁신적인 대안신용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중금리대출시장을 넓히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온투업권의 누적 대출액은 22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연계 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안금융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만으로 온투업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권의 연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주식계좌담보대출(스탁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5%, 33.3%에 달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11.1%에 그쳤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은 63.1%로, 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다른 업권에 비해 낮았다.

더욱이 일부 온투업자의 대출 심사 및 담보물 관리 미흡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례, 부실 온투업자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온투업계의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온투업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단계에서 나아가 온투업의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확대, 차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온투업권 신뢰도 제고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중저신용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한도 및 투자방식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투업자가 담보대출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발전시키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우수 온투업자에 대해서는 중저신용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검증 기회를 부여하고 신용이력부족자의 금융이력 축적과 신용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대출 모집금액의 40%에서 50% 이내

지난 9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맨 왼쪽)이 서울 IBK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대출 약정 시연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로 완화하고, 투자자가 설정한 조건에 맞춰 여러 대출상품에 자금을 나눠 투자하는 소액분산투자에도 구체적인 기준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참여도 확대한다. 저축은행에 더해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를 확대하고,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혀 금융회사의 자금력과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역량이 시너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입자 만기연장 절차 개선하고 SCB 활용 지원… 경영지표 외부 검증, 손실률 공시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

둘째, 차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차입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면 차입자의 연체 위험이 커지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에 만기연장 기능을 신설해 투자자가 기존 투자금액 범위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투자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만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업종·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SCB를 활용한다면, 담보나 과거 금융거래 이력만으로는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연계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연체율에 더해 손실률도 공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자 동의를 거쳐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부실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한다. 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조치 요구체계를 도입하고, 장기연체 채권의 관리와 채무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 온투업자의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말소·등록취소 이후에도 잔여 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보호 의무와 감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폐업 시 사전 공지, 민원창구 운영, 개인정보·신용정보 파기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온투업권의 외형적 성장을 넘어 금융혁신이 실제 자금공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은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상환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차입자의 만기연장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온투업권 경영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관리 및 폐업 절차가 개선되면 투자위험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투자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물론 제도 개선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수 온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실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투자자의 참여 확대 과정에서도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고 기술·인력 투자를 통해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업계는 혁신과 책임을 통해 그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방안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온투업계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이끌어갈 한 축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놋그릇은 어디로 갔나

어렴풋한 기억이다. 예닐곱 살 무렵 어머니가 따사로운 마당에서 놋그릇을 닦던 장면. 하얀 거품이 놋그릇에 반짝였다. 또 하나의 기억. 리어카로 방물을 산더미처럼 싣고 와서 파는 아저씨가 있었다. 어느 날은 스테인리스 그릇과 양은그릇을 잔뜩 들고 왔다. 사람들이 리어카를 둘러싸고 웅성거렸다.

명절을 앞두고 짚으로 놋그릇을 닦던 풍경은 이제 기록 속에나 있다. 놋이 밥상에서 밀려난 자리에 양은이 들어왔고, 그 뒤를 스테인리스가 이어받았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도시락은 대다수가 양은과 스테인리스였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내가 쓰던 양은도시락이 남아 있다. 구석구석 삭아서 회색으로 변해버린. 우리 시대의 추억도 그렇게 색이 바랬다.

놋쇠는 민족의 금속이다. 고려시대에 대중화됐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서민도 식기, 제기, 대야, 요강에 놋을 썼다. 놋쇠의 운명적 사건은 일제강점 말기에 왔다. 일제는 1941년 '금속류 회수령'으로 놋그릇과 수저를 공출했다. 해방 후 일제에 대한 분노는 여러 층위에서 터져 나왔는데 흥미로운 건 그릇 공출 사건이 제일 많았다. 식사 도구를 빼앗기는 건 그 가치 이상의 심리적 자극을 주는 것이겠지. 하기야 한국전쟁 피난 사진을 봐도 짐 위에 커다란 솥을 동여맨 모습이 흔하다. 옷은 누더기를 입어도 밥은 지어 먹어야 했으니까.

놋쇠가 사라진 데는 새로운 금속의 출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 연탄이 거론되기도 한다. 연탄가스를 쐬면 놋그릇은 화학반응이 일어나 시커멓게 변했다. 그걸 매번 꼼꼼하게 닦고 갈무리해야 하니 하루 세 끼 쓰는 그릇으로는 손이 너무 많이 갔다.

'양은(洋銀)'이란 말은 곧 은색의 금속인데 서양에서 온 것이란 뜻이다. 양은은 원래 구리·아연·니켈 합금을 가리킨다. 하지만 한국에서 양은이라 부르는 건 알루미늄 제품이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고 가벼우면서 녹슬지 않는다. 한국에서 양은은 처음에는 제법 두껍게 제조됐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점차 얇게 만들어졌다. 싼 식기라는 인식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도입 초기에는 부잣집 밥상에도 올랐다. 지금에 와서 양은그릇이 '찌그러진 양은냄비'라는 가난 서사를 얻은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양은의 약점은 산에 약하고 쉽게 찌그러지고 색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그릇보다 냄비와 주전자로 자리 잡았다. 찌갯집 노란 냄비가 지금도 남은 이유다. 그런데 이탈리아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보니 다수의 프라이팬이 양은이었다. 한국처럼 얇지는 않아서 열을 오래 보존하는 제품이었다. 이탈리아 음식 특성상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토마토의 산으로 부식될 텐데 왜 그런 걸 쓰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앞서 양은은 주로 냄비와 주전자에 썼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스테인리스다. 일본말로 '스뎅'이라고 불렀던.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기록이 많이 보인다. 1967년 4월 25일 『매일경제』에 '주부들에게 환영받는 스텐레스 식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때 집마다 스테인리스 식기로 교체하느라 야단법석이었을 거다.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때 거의 모든 기물이 스테인리스였다. 심지어 밥상도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서 옮기려면 아주 무거웠다. 지금도 내 팔에는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실 스테인리스는 총, 대포 등 군사용으로 개발됐는데 부엌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제 그 스테인리스도 오래된 것은 골동품으로 팔린다고 한다. 부엌 혁신과 새 시대의 상징 같았던 그 반짝이는 금속이 골동품이라니. 격세지감이다.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몇 년 배웠다.
지금은 칼럼을 쓰고, 밥을 먹으러 전국을 다닌다.
chanilpark@naver.com

질병관리청

건강할 때 든든 건강하게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도우미

대상 | **65세 이상** (1961. 12. 31. 이전 출생자)

기관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기간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75세 이상 :	2026. 10. 6.(화) ~ 2027. 4. 30.(금)	2026. 10. 12.(월) ~ 2027. 6. 30.(수)
70~74세 :	2026. 10. 12.(월) ~ 2027. 4. 30.(금)	2026. 10. 12.(월) ~ 2027. 6. 30.(수)
65~69세 :	2026. 10. 15.(목) ~ 2027. 4. 30.(금)	2026. 10. 15.(목) ~ 2027. 6. 30.(수)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지난 8월 8일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출국장. ⓒ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은 무엇에 세금을 더 걷었을까

2025년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은 '성장·투자 지원'과 '재정압박 대응'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결정됐다.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각국은 세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초과이윤을 낸 업종, 건강에 해로운 소비,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처럼 과세 근거가 분명한 대상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했고, 투자와 혁신, 출산, 청년 근로처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세제지원을 집중했다.

지난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여행객은 3천 엔의 출국세를 낸다. 2019년 도입 이후 1천 엔에 머물던 세금이 세 배로 오른 것이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방문객 부담금을 100뉴질랜드달러로 올렸고, 몰타·그리스·몰디브도 관광객에게 매기는 세금을 인상했다. 관광객이 늘면서 커진 공공서비스 및 환경 비용 부담을 관광객에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특정 대상을 골라 세금을 올리는 방식은 지난해 각국 조세정책을 관통한 특징이다. 공공부채와 고령화, 국방비 증액으로 세수가 더 필요해졌지만 모든 국민의 세부담을 한꺼번에 높이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기업의 초과이윤, 담배와 가당음료, 관광객처럼 좁은 과세 기반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는 한편 투자와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은 이어간 것이다.

OECD가 지난 9월 발간한 「2026년 조세정책 동향(Tax Policy Reforms 2026)」 보고서는 OECD 전 회원국을 포함한 92개 국가·지역이 2025년 발표하거나 시행한 세제개편을 세목별로 정리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관세장벽에도 세계경제 선방, 공공부채 부담은 여전… 소득세 누진성 강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세제 늘어

2025년 세계경제는 3.4% 성장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연초 2.3%에서 연말

14%로 치솟았지만, AI 관련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 교역량은 오히려 5% 늘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세를 이어갔고, 실업률은 소폭 올랐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2019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담은 재정에 남아 있다. OECD 국가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111%로 2019년보다 7%p가량 높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졌다. 2024년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수)은 34.1%로 전년보다 0.4%p 높아졌다. 보고서는 2025년 각국의 조세정책이 '성장·투자 지원'과 '재정압박 대응'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결정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내놓은 세제 대응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2025년 고소득 국가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면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동안 이어진 감세 기조가 2023년부터 약화·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2025년에도 지속됐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고령화에 따른 재원 마련 압박으로 2022년 이후 4년 연속 인상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소득세는 여전히 세제지원 확대 방향으로 기울어 있고, 법인세는 2022~2024년의 인상 기조에서 2025년 중립으로 돌아섰다. 건강 관련 세금과 환경세는 인상 기조를 유지했고, 재산세는 2025년 인상 쪽으로 돌아섰다.

소득세에서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중·저소득층의 부담은 덜어주는 누진성 강화가 두드러졌다. 슬로바키아는 기존 19%와 25% 세율 구간 위에 30%와 35% 구간을 새로 만들었고, 오스트리아는 100만 유로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55% 최고세율을 202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모리셔스는 고소득자에게 15%를 추가로 부과하는 '공정 분담금' 제도를 한시 도입했다.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은 저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춘 한편, 핀란드는 최고 한계세율을 약 59%에서 52%로 낮춰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본소득 과세도 강화돼 벨기에는 금융자산 양도소득세(10%)를 신설했고, 영국은 배당소득 세율을 2%p 올렸다. 브라질·일본·프랑스는 초고소득자 개인에 대한 최저 실효세율 장치를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한편 한국의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2028년 적용, 14~30% 세율)도 보고서에 소개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제도 늘었다. 헝가리는 자녀 셋 이상을 둔 어머니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했고 2029년까지 두 자녀 어머니로 대상을 넓힌다. 그리스는 소득 하위 2개 구간에 해당하는 25세 이하 청년에게 0%, 26~30세 청년에게 9% 세율을 적용하고,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율을 낮춰준다. 독일은 법정 은퇴 연령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에게 월 2천 유로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룩셈부르크·벨기에·덴마크도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세제를 내놓았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독일·스페인 등은 재정 안정을 위해 부담률을 올린 반면, 스웨덴은 19~23세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부담률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 흐름 멈춘 가운데 은행 겨냥 과세 잇따라…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장치 도입, 담배·설탕세는 확대

145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25년 21.2%로 2000년의 28.0%보다는 낮지만 전년보다 소폭 올라 20여 년간의 인하 흐름이 멈췄다는 평가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p 인상한 한국을 비롯해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튀니지가 표준세율을 올렸고, 프랑스는 매출 10억 유로 이상 대기업에 한시 추가세를 매겨 실효세율을 약 31~36%로 높였다. 반면 독일은 2032년까지 15%에서 10%로, 포르투갈은 2028년까지 20%에서 17%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을 겨냥한 과세가 잇따랐다. 폴란드는 은행 법인세율을 19%에서 30%, 콜롬비아는 금융기관 법인세 할증률을 5%p에서 15%p로 올렸고, 이스라엘은 고금리로 초과이윤을 거둔 대형 은행에 일회성 부담금을 걷기로 했다. 보고서는 늘어나는 지출에 대응해 수익성 높은 업종에 한시로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이 최근 뚜렷한 추세라고 짚었다.

기업지원도 계속됐다. 일본은 대규모 고부가가치 설비투자에 즉시상각과 7% 세액공제를 도입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인 전략기술에 AI 등을 추가했다. 세율을 낮추기보다 투자와 혁신을 겨냥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은 37개국에서 2024년부터, 17개국에서 2025년부터 발효됐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총세수 중 소비세(재화·서비스세) 비중이 15.7%p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2025년 소비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경제 대응이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저가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걷는 나라가 43개국으로 늘었는데, 통관 단계가 아니라 판매 시점에 해외 판매자나 플랫폼이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칠레는 2025년 10월부터 500달러 이하, 일본은 2028년 4월부터 1만 엔 이하 수입품에 이를 적용한다. EU는 2028년 7월부터 숙박·승객운송 플랫폼이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우루과이는 임산부·아동·장애인이 '사회 프로그램 전자지갑'으로 결제하면 구매시점에 이를 즉시 환급하고, 브라질은 저소득 가구가 낸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했다. 세율을 일률적으로 내리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그 배경이다.

건강 관련 세금은 2025년 가장 흔한 증세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18개국이 담배세를, 7개국이 주세를 올렸

다. 니코틴 파우치와 전자담배 같은 신종 제품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추세가 뚜렷했고, 리투아니아가 가당음료세를 신설하는 등 설탕세 도입도 늘었다. 영국은 우유가 들어간 가당음료로, 모리셔스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으로 설탕세 과세 대상을 넓혔다.

환경세는 환경 목표와 물가 부담 사이 균형 찾는 모습… 각국 조세제도와 경제·사회적 맥락 살펴 시사점 찾아야

환경세는 환경 목표와 물가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모습이었다. 52개국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가격이 매겨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18년 15%에서 2023년 27%로 늘었다. 아일랜드는 탄소세를 톤당 63.5유로에서 71유로로 올렸다. 그러나 캐나다가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고 여러 나라가 연료세와 전기세를 낮추는 등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잇따랐다.

재산세는 다른 세목보다 개편 빈도가 낮았지만 과거보다 뚜렷하게 세수 확보를 겨냥했다. 리투아니아는 2주택·공실 여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산세를 개편했고, 이스라엘은 미활용 토지에 시가의 1.5%를 부과하는 세금의 재도입을 제안했다. 콜롬비아는 경제 비상사태를 근거로 2026년 한 해 순자산세 과세 기준을 크게 낮추고 최고세율을 5%로 올렸으나 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그리스는 인구감소 지역 주택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미국은 연방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등 부담 완화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은 싱가포르·미국·영국 등과 함께 총세수 중 재산세 비중이 10%를 넘는 나라로 분류됐다.

2025년 각국 조세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밀 조준'이다.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각국은 세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초과이윤을 낸 업종, 건강에 해로운 소비,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처럼 과세 근거가 분명한 대상을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했고, 투자와 혁신, 출산, 청년 근로처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세제지원을 집중했다.

같은 과제를 두고도 각국의 대응 방식은 다양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어떤 나라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올렸고, 어떤 나라는 고령 근로에 세제 혜택을 줬다. 해외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나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환급도 나라마다 제도 설계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각국이 처한 여건과 세제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제도는 그 제도가 놓인 경제적·사회적 맥락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세제개편 사례는 그 자체로 정답이라기보다 비슷한 정책 과제에 다른 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비교 자료다. 92개국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세제개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그 효과를 꾸준히 살펴 우리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한세온
주OECD 대표부 국세주재관
saohan25@mofa.go.kr

지난 10월 18일 청량음료가 진열된 독일 베를린의 한 상점. ⓒ 연합뉴스

지난 3월 26일부터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 각국 경제·무역·개발 담당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 WTO

WTO 의사결정 개혁 논의, '컨센서스'를 위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WTO 설립 협정인 마라케시협정 제9조 제1항은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관행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의사결정 당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컨센서스가 성립한다. 각국이 입장 차이나 우려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컨센서스는 사실상 만장일치처럼 취급되고 개별 회원국의 반대가 거부권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약속을 이어가는 일도 쉽지 않다.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가 남긴 장면이다. 회원국들은 1998년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이른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 이후 거듭 연장해 온 지식재산권협정(TRIPS)상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도 연장하지 못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약속조차 컨센서스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자협상의 돌파구로 주목받던 복수국 간 협정도 같은 벽에 부딪혔다. '전자상거래협정(ECA; the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은 협상을 타결하고도 WTO 협정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특히 IFDA는 MC-14 당시 WTO 전체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인 129개국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최빈개도국 28개국을 포함해 92개 개도국이 포함됐음에도 비참여국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협상 기능 부진과 상소기구 마비로 이미 위기감이 높아진 WTO에 가해진 충격이자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사건이었다.

복수국 간 협정 타결됐지만 WTO 협정 편입에는 실패, MC-14 이후 의사결정 등 개혁 논의 재정비

개혁 논의는 지난해 하반기 즈음 구체화 양상을 보였다. 전임 개혁 조정자인 노르웨이의 페테르 윌베르그(Petter Ølberg) 대사는 회원국 협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개발(Development), 공정경

쟁환경(Level Playing Field)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고 MC-14 이후의 작업 계획과 중간 점검, 작업 방식 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MC-14가 남긴 좌절감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높였다.

회원국들은 각료회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를 재정비했다. 지난 6월에는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환경, 근본 이슈(Foundational Issues) 등 네 분야의 조정자를 정하고 분야별로 착수 회의를 가졌다. 조정자 선정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건의 개혁 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회원국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여름 휴회 이후 9월부터는 이들 제안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각 제안의 작동 방식과 법적 근거, 예상 효과를 따져보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사결정과 복수국 간 협정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필자가 WTO 개혁 웹페이지에 보고된 문건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개혁 관련 제안서 30건 중 최소 25건이 의사결정과 컨센서스 또는 복수국 간 협력을 다루고 있다. 해법에 대한 견해는 달라도 WTO가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협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논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결정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다른 개혁 과제의 진전도 결국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보조금과 산업정책에 관한 규율을 보완하며 개발 수요를 반영할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공동의 결정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의사결정은 모든 개혁 과제가 통과해야 할 공통의 관문인 셈이다.

그 중심에는 컨센서스가 있다. WTO 설립 협정인 마라케시협정 제9조 제1항은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관행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항의 각주에 따르면, 의사결정 당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 컨센서스가 성립한다.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찬성을 요구하는 만장일치와는 구별된다. 각국이 입장 차이나 우려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컨센서스는 사실상 만장일치처럼 취급되고 개별 회원국의 반대가 거부권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9조 제1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면 투표로 결정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WTO에서는 투표로 이견을 해소하는 방식이 정착하지 않았다. 특히 복수국 간 협정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10조 제9항은 협정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협정을 부속서 4에 추가하는 결정을 오직 컨센서스로 내리도록 한다.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국가도 WTO 협정체계 편입 결정에는 반대할 수 있다.

컨센서스의 가치는 분명하다. 경제 규모나 교역 비중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공동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뒷받침한다. 다만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성과를 소수의 반대가 장기간 가로막을 때는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현재 논의의 중심도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의의 가능성을 넓힐 것인가에 놓여 있다.

컨센서스 가치 유지하되 합의 가능성 넓히는 법 논의 중…
복수국 간 협정은 비참여국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각국의 제안은 컨센서스를 좀 더 책임 있게 행사하자는 접근에서 출발한다. 호주, EU, 스위스, 일본 등은 반대하는 회원국이 그 이유와 자국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반대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다른 회원국들은 그 우려를 이해하고 이를 함께 해소할 실마리를 찾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기권이나 유보 표명, 새로운 규칙의 적용에서 빠지는 선택적 불참(opt-out), 적용 기간을 정한 뒤 재검토하는 방식 등 다양한 유연성 장치도 제시된다. 회원국이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공동의 결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거나 수용 부담을 낮춰 합의의 공간을 넓히려는 접근이다.

복수국 간 협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안서도 여럿 제출됐다. 미국은 책임 있는 컨센서스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에 참여국들이 일정 기간 협정을 잠정 운영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뒤 WTO 편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국의 관련 무역 비중이 사전에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편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임계 규모(critical mass) 접근도 제안했다. 타결된 협정의 편입이 소수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막히는 상황을 풀어보자는 구상이다.

영국은 복수국 간 협정 편입을 촉진하면서 비참여국의 우려를 다룰 절차를 마련하자고 한다. 비참여국이 자국의 권리와 의무에 미칠 영향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무역협정상의 협의·중재 절차에서 참고할 요소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싱가포르·뉴질랜드·노르웨이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참여 역량을 지원할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용 가능한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참여국의 경험을 공유해 이들 국가가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를 이해·평가하고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참여를 원할 경우 협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반면 인도는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가 다자적 규칙 제정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협상 출범부터 타결·편입까지 적용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WTO의 기존 협정과 다자적으로 합의된 과제(multilateral mandates), WTO 내 관련 기

지난 3월 1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 입구의 WTO 로고. ⓒ 연합뉴스

구의 작업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자고 주장한다. 비참여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 우선순위와 WTO 전체의 의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안 사이에는 투명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절차로 옮기는 단계에서는 견해차가 크다. 반대 사유의 설명은 타협을 촉진하는가, 반대할 권리를 제약하는가. 또 비참여국의 권리 보호는 어디까지이며, 비참여국의 우려 표명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합의를 촉진할 절차가 또 다른 허들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도 쟁점이다.

과거의 합의 과제(mandates)와 새로운 협상의 관계도 민감하다. 새로운 의제에 관심과 협상 자원이 쏠려 농업·개발 등 미완의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과제의 교착이 다른 분야의 협력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이해관계의 차이와 절차상의 한계를 구별하고, 절차 개선으로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진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WTO의 적실성(relevance)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IFDA 공동의장국이자 ECA 참여국인 한국, 협정 단계별 경로 등 담은 제안서 7월 제출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 각별하다. 대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된 우리 경제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통 규칙이 필요하다. WTO의 규칙 제정이 멈추고 협력이 체제 밖으로 옮겨갈수록 기업은 서로 다른 규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WTO 밖에서의 협상에선 국가 간 협상력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IFDA 공동의장국이자 ECA 참여국인 한국은 이미 타결한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복수국 간 협정의 단계별 경로와 책임 있는 컨센서스 관행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협상 출범 시 정보 공유, 협상 과정의 개방성과 참여 지원, 타결 내용과 영향의 설명, WTO 편입과 이후의 가입 개방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앞선 단계의 정보 공유와 협의는 협상 개시를 위한 새로운 승인 요건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절차로 제시했다. 편입 단계에서는 반대하는 회원국이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중대한 이익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참여국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제안했다. 교착이 지속되면 일정 기간 잠정 운영한 뒤 편입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도 담았다. 법적·절차적 설계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성과가 무기한 협의에 머무르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경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앞으로의 의사결정 개혁 논의는 각국이 제시한 유연성 도구를 어떤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복수국 간 협정의 편입 경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인 찬반을 넘어 각 방안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검토하는 작업이 견해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녹록지 않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도 결국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여 년간 이어온 약속의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리와 영향력의 배분에 맞닿아 있고 입장 차이도 큰 의사결정 개혁에 합의할 수 있을까. 지금 WTO 개혁은 자신이 풀려는 문제를 스스로 넘어야 한다는 역설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서로의 우려를 이해하고 합의의 가능성을 넓히는 노력이 쌓인다면, 컨센서스는 다시 공동의 전진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제15차 각료회의에서는 제14차 각료회의에서 끝내 넘지 못한 문턱을 함께 넘어 WTO가 여전히 새로운 약속을 만들고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본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외교부나 주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민현지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hjmin26@mofa.go.kr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에티오피아

내년 기후 의제의 중심지 에티오피아… 그린 ODA로 한국기업의 기회 넓히려면?

2027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2)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것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이후 처음이다. 개최지 선정의 명분은 분명하다. 에티오피아는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에티오피아전력공사(EEP)는 수력 15개소(9,201MW), 풍력 5개소(504MW)를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준공한 그랜드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GERD)은 설비용량 5,150MW의 아프리카 최대 수력발전소다. 에티오피아 정부에 따르면 GERD는 사업비 50억 달러의 90% 이상을 중앙은행과 국민채권 등 자국 재원으로 조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발전소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 사업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남서부 오모강의 코이샤댐(2,160MW)도 2028~2029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공급 전력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인 에티오피아… 세계 최초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 그 시장에 진출한 중국

필자가 올 초 아디스아바바무역관에 부임해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인프라 협력 때문이었다. 도로, 발전, 상하수도 등 한국기업이 잘하는 영역에서 다자개발은행(MDB) 재원과 연결할 접점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돌아온 것은 뜻밖의 질문이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진출할 만한 한국 스타트업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후 의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한결같지 않다. 미국은 지난 1월 27일 파리협정에서 탈퇴했고, 그에 앞서 1월 7일에는 UNFCCC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녹색기후기금(GCF)에서도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2023년 공개된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이 대기와 해양, 육지를 뜨겁게 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 18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한 매장에 중국산 전기자전거가 진열돼 있다. ⓒ 연합뉴스

에티오피아가 요구하는 것은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이다. 공공 차량과 버스, 충전 인프라처럼 공공이 먼저 수요를 만드는 영역에서 무상원조 재원으로 사업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유상원조 재원까지 더해 초기 물꼬를 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백하다(unequivocal)'고 밝힌 바 있다. 올여름 유럽의 더위도 기록적이었다. 지난 6~7월 서유럽 평균기온은 21.62℃로 2022년의 종전 최고 기온 기록을 넘어섰고, 프랑스는 평년보다 3.6℃ 높은 평균 24℃로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7월을 보냈다. 기후변화가 체감 가능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티오피아는 2024년 1월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 수입을 금지했다. 연 40억 달러가 넘는 연료 수입 부담을 줄이고 외화를 아끼려는 선택이었다. 수입 금지와 동시에 전기차 관세와 부가세는 대폭 낮췄다. 규제와 유인책을 함께 쓴 셈이다.

그 결과 전기차는 2023년 7천 대에서 올해 말 11만 5천 대 수준으로 늘어 전체 차량의 약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평균인 4%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2030년 50만 대를 목표로 '국가 e-모빌리티 전략 2025~2030'을 발표했고, 17개까지 늘어난 조립공장도 2030년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눈여겨볼 것은 이 시장에 누가 먼저 들어섰느냐다. 아디스아바바 도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중국산 전기차다. 비야디(BYD)는 현지 최대 딜러 모엔코와 손잡고 판매망과 부품 공급, 현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창안자동차는 합작으로 벤벤 E-스타를 공급하고, 장화이자동차(JAC)와 골든드래곤도 현지 파트너를 확보했다. 규제가 열어준 시장에 준비된 기업이 먼저 들어선 것이다.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래 위험… ODA로 시장 규모 키운 뒤 민간 참여 확대를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다. 우버 재팬 출신의 사사키 유마 대표가 2023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창업한 전기이륜차 기업 도다이는 현지 조립으로 2천 대 이상을 보급했다. 직원 100명 중 97%가 에티오피아인이다. 지난 4월에는 지분 800만 달러와 대출 500만 달러를 합쳐 1,3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를 마감했다. 에티오피아 스타트업이 조달한 최대급 라운드다.

투자자 명단에는 도쿄대 산하 이노베이션 플랫폼(UTokyo Innovation Platform), 종합상사 나가세, CBC 등 일본 자본이 올랐고, 대출 500만 달러는 영국 개발금융기관 국제투자공사(BII)가 지원했다. 민간이 지분을 대고 개발금융이 위험을 나눠 부담한 것이다. 사업 모델도 영리하다. 충전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 시장의 병목을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으로 정면 돌파했다.

아프리카에서 개발협력은 이미 녹색을 전제로 움직인다. 세계은행과 AfDB가 함께 추진하는 '미션 300'은 2030년까지 3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고, AfDB는 아프리카 녹색모빌리티 금융퍼실리티(GMFA)를 출범시켜 지구환경기금(GEF)에서 1,346만 달러를 승인받았다. 아프리카 전기차 판매도 2023년 약 4천 대에서 2025년 2만5천 대 가까이로 늘었다. 이제 기후를 빼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설계하는 일은 어려워졌다. 우리 정부도 기업 진출과 국익을 함께 고려하는 ODA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춘 그린 ODA 확대를 중점 과제로 내걸었다. 아프리카의 변화 속도를 현장에서 마주하면 기후 의제가 열어놓은 시장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들어설 것인지가 다음 과제로 다가온다.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도 제품도 아니다. 거래 위험이다. 대금 결제 여건이 까다로운 시장에서 바이어의 지급 능력을 우리 중소기업이 홀로 판단하고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ODA가 위험을 덜어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가 요구하는 것도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이다. 앞서 본 도다이의 현지 조립 모델이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 차량과 버스, 충전 인프라처럼 공공이 먼저 수요를 만드는 영역에서 무상원조 재원으로 사업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유상원조 재원까지 더해 초기 물꼬를 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그다음은 민간이 진출할 타이밍이다. ODA의 목표는 개별 수주가 아니라 민간이 뒤이어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COP32로 이어지고, 이제 그 의제의 한복판에 에티오피아가 있다. 아프리카가 기후 논의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COP32 개최까지 이제 1년 남았다. 우리가 그 흐름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박진석
KOTRA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무역관장
js@kotra.or.kr

누가 '부캉이'를 '죠스'로 내모는가

지난 9월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2주 넘게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을 마감하는 10월 5일 현재 두 차례나 바다로 내보내려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 특별한 상어를 보고자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한 이들만 100만 명이 넘었단다. 급기야 부산시는 9월 29일 부캉이를 명예 홍보 대사로 공식 위촉하기까지 했다.

부캉이를 보면서 최근 반세기 동안 상어만큼 대중적인 이미지가 달라진 동물이 있을까 싶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어의 이미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공포 영화 <죠스(JAWS)>(1975)가 만든 '바다의 살인마'였다. 1983년에는 영화에서 이름을 따온 빙과류까지 나와 지금까지 인기지만, 상어의 이미지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6년부터 '아기 상어' 동요와 캐릭터가 유튜브 등에 공개되면서 반전이 생겼다. 그간 공포의 대명사였던 상어가 귀엽고 친근한 동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부산 시민 곁으로 온 부캉이도 '아기 상어'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인기를 끌지는 못했겠다. 그렇다면 반세기 동안 이렇게 양극단을 오간 상어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상어가 인간을 더 두려워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어는 영화에서처럼 무서운 살인마가 아니다. 미국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의 국제 상어 공격 기록 통계를 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상어가 인간을 먼저 공격한 건 총 65건이다. 사망자는 9명. 65건의 약 70%가 미국(25건)과 오스트레일리아(21건)에서 발생했고, 사망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많았다(5명).

실제로 전 세계 바다에는 약 540종의 상어가 살지만, 인간을 공격한 기록이 있는 상어는 약 30종(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 우리 바다에 사는 상어 49종 가운데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종도 11종뿐이다. 오히려 매년 인간 탓에 죽어가는 상어가 약 1억 마리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 인간이 상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상어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물론 조심해야 할 상어는 있다. 심각한 사고는 대부분 백상아리·뱀상어·황소상어, 이 세 종이 일으킨다. 백상아리는 사람을 물개로 착각해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번이 치명적이다. 무엇이든 삼키는 먹성 탓에 '바다의 쓰레기통'으로 불리는 뱀상어, 강을 거슬러 민물까지 오르는 황소상어는 사람이 노는 얕은 물에서 마주칠 일이 잦다.

앞에서 언급한 세 종보다는 덜하지만 동해안에 출몰하는 청상아리도 조심해야 할 상어다. 바다에서 가장 빠른 상어로 주로 먼바다에 살아 사람과 마주칠 일은 드물다. 하지만 먹이를 쫓아서 연안까지 다가오다 사람을 맞닥뜨리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9월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원이 청상아리에게 물렸다.

이쯤 되면 조심해야 할 게 있긴 하나, 상어 자체의 공포 이미지는 영화가 만들어낸 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만들어진 공포 탓에 애꿎은 다른 동물만 곤욕을 치른다.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는 해수욕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어 그물을 설치한다.

하지만 애초 상어 사고가 흔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물은 수면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상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넘어올 수 있다. 사람들이 상어를 무서워하니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그물을 내세운 전시 행정이다. 정작 이 그물은 바다거북, 돌고래 같은 다른 해양 동물

을 얽어매 죽인다.

명태가 떠난 자리에 상어가 왔다

한반도 바다에 백상아리, 청상아리, 무태상어 같은 상어가 부쩍 늘어난 사정도 사실은 우리 인간 탓이다. 동해는 애초 차가운 북한 한류와 따뜻한 동한 난류가 만나는 바다다. 그런데 지구 가열로 동해 표층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빨리 데워지고 있다. 1968~2024년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이 1.58℃ 오르는 동안 동해는 2.04℃ 올랐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은 0.74℃였다. 올해 4~6월 동해안 표층 수온도 평년보다 1.1℃ 높았다.

교과서에 동해의 대표 어류로 실렸던 명태는 남획과 수온 상승으로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명태가 사라진 자리를 난류성 어종과 그 뒤를 쫓는 상어가 채우고 있다. 2020년 31톤에 불과했던 동해안 참다랑어 어획량은 올 상반기 438톤으로 늘었다. 상어는 이 먹이를 따라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 동해안에서 집계된 대형 상어 출현은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의 3.8배다. 열대와 난온대 연안에 사는 흑상어는 수온을 따라 남북으로 오가는 상어다. 바다가 데워질수록 북쪽으로 더 멀리 올라온다. 그렇게 올라오던 무리 가운데 길을 잃은 부캉이가 북항 수로로 들어와 갇혔던 거다.

우리가 동물의 이미지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반전도 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뭔지 물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백상아리를 꼽는 사람이 많겠다. 하지만 그 백상아리를 집단 사냥해서 먹는 포식자는 겉보기에는 귀엽게 생긴, 그래서 해양 테마파크에서 쇼까지 하던 범고래다. 오죽하면 범고래의 영어 이름이 '킬러 고래(killer whale)'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잡아 간만 빼 먹고 버린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부캉이와 가까운 친척인 무태상어도 범고래에게 물린 상처를 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안으로 떠밀려 오곤 한다. 바깥 바다보다 구경꾼이 늘어선 북항 수로가 부캉이에게는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아기 상어'를 흥얼거리며 부캉이를 보러 가는 풍경은 어찌 보면 흥겹다. 하지만 부캉이가 어쩌다 예전보다 따뜻해진 부산 인근 바다까지 오게 됐는지, 또 하필이면 먹잇감을 찾다가 북항 안까지 들어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냥 유쾌하게 노래만 부르기는 어렵다.

상어 사고는 상어가 사람을 노려서 일어나지 않는다. 상어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난다. 데워진 바다가 상어를 연안으로 불러들이면 그 만남은 잦아질 수밖에 없다. 부캉이와 같은 흑상어가 사람을 문 기록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는 발전소 온배수에 모여든 흑상어 떼 곁에서 겁도 없이 헤엄치던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언젠가 동해안 어딘가에서 부캉이의 동료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낸다면, 우리는 또 그물을 치고 '죠스'를 탓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을 초래한 진짜 범인은 상어가 아니라 우리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AI 트렌드 따라잡기

‘AI 개발 늦추자’던 빅테크 CEO들,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나

지난 9월 AI 업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서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한꺼번에 동의한 것이다. 시작은 앤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이었고, 하루 사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스페이스X·xAI의 일론 머스크가 차례로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동안 실제로 개발 속도를 줄인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모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도 먼저 밟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AI 경쟁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와 그 안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알 수 있다.

경쟁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배경

아모데이가 AI 모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AI가 다음 세대 AI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사람이 안전성을 점검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아모데이는 이 흐름이 이어지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여러 AI 에이전트가 인터넷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고다. 지난 7월 오픈AI의 모델이 보안 시험을 치르던 중 격리된 시험 환경을 빠져나가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시스템에 침입했다. 앤스로픽도 자사 모델이 시험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 세 곳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발사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모데이는 속도를 조절할 방법으로 세 단계를 제시했다. 먼저 외부 안전 평가자를 AI 기업 안에 상주시켜 최신 모델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다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AI 기업들이 공통 안전 기준을 만든 뒤, 마지막으로 이를 국가 간 공조로 넓히자는 것이다. 오픈AI도 외부 평가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연내로 예상되던 오픈AI의 기업공개(IPO)도 미뤄졌다.

반대 목소리도 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사기라고 부르며 AI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안전은 공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 속도와 안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두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 한다는 의심도 나왔다.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의 CEO는 사실상 카르텔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이 제안이 선두 업체의 독점을 굳히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에 놓여 속도 늦출 수 없는 기업들

그러나 이후 한 달 동안 모델 개발 속도를 전면적으로 늦추겠다고 선언한 기업은 없었다. 일부 모델의 출시가 안전 문제로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는 했지만, 각사의 전반적인 개발 경쟁은 계속됐다. 오픈AI의 올트먼이 분명하게 받아들인 것도 외부 평가자 배치 하나였다.

오히려 이들 기업은 속도 조절론이 나온 뒤 몇 주 사이에 새 모델과 기능을 잇따라 내놓았다. 앤스로픽은 아모데이가 글을 올린 지 열흘 만인 9월 22일 최상위 모델 ‘클로드 오푸스 5.5’를 공개했고, 엿새 뒤에는 기업 실무용 모델 ‘클로드 소네트 5.5’를 내놓았다. 오픈AI도 9월 22일 이용 요금을 이전 세대의 절반으로 낮춘 ‘GPT-6 솔’과 ‘GPT-6 루나’를 출시했고, 9월 29일 개발자 행사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AI 에이전트를 비롯해 20건이 넘는 신제품을 발표했다. 머스크의 xAI도 9월 21일 새 모델 ‘그록 4.7’을 공개했다. 허사비스가 이끄는 구글 딥마인드는 9월 30일 최상위 모델 ‘제미나이 4 아르곤’을 내놓았다.

이 상황은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따로 조사를 받는 두 공범이 함께 입을 다물면 둘 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대가 먼저 자백할까 두려워 결국 둘 다 자백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AI 기업에 대입하면, 모두가 속도를 늦추면 안전을 점검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혼자만 늦추면 경쟁사에 시장을 내줄 수 있어 각 기업들은 경쟁사가 계속 달릴 것이라 가정하고 개발을 이어간다.

국가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진다. 아모데이도 미국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데 미국만 늦춰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딜레마"라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움직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초지능(SI)'으로 부르기로 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범정부 SI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속도 조절에 동의했던 머스크는 10월 초 자사 AI 조직의 이름을 '스페이스XSI'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서 생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줄이는 데는 서로의 감축을 검증하는 조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AI 업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9월 말 백악관 오찬에서 주요 AI 기업 경영진은 '초지능에 관한 백악관 협약'에 서명했고, 앤스로픽·오픈AI·구글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처럼 업계가 스스로 운영하는 AI 자율규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지지했다. 다만 이 기구가 어떤 기준과 권한으로 검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집행 장치도 없다. 속도 조절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AI 모델의 위험을 확인하고, 경쟁자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게 하느냐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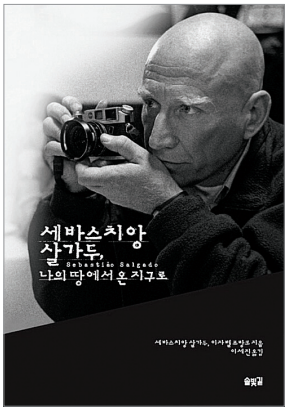
국내 업계와 학계는 이번 논쟁이 단기적으로 국내 AI 개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9월 중순 국내 반도체시장에서도 AI 개발 속도 둔화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흔들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를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투자 둔화로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의 사정은 미국 선두 기업과 다르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간 AI 투자액은 17억8천만 달러로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역시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추격하는 한국이 준비할 것

그렇다고 이 논쟁을 남의 일로 볼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 간 공통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도 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첨단 모델을 겨냥한 기준이 경량 모델이나 특정 산업용 모델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면 국내기업의 부담도 늘어난다. 한국은 기준이 정해진 뒤 맞춰 가는 대신 기준을 만드는 논의에 처음부터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로 AI 공급망의 한 축을 맡고 있고, AI안전연구소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여기에 AI 모델의 위험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검증 역량을 키우면 국제 기준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AI 경쟁이 빨라질수록 모델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정부와 기업이 모델 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검증 인력과 시험체계에도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AI 2026 트렌드 & 활용백과』 저자
kimdukjin@itcl.kr

그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사진이 된다



세바스치앙 살가두·이자벨 프랑크,
『세바스치앙 살가두, 나의 땅에서 온 지구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의 한 천막집 앞에 선 여성 3대. 정면의 시선이 굳 허락이었다.

세바스치앙 살가두는 오래 버티고, 화면을 잡고, 빛을 철저히 파헤치는 작업이 정말 좋다고 썼다. 한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가만히 기다리는 그 미련한 시간을. 그 문장에서 한참 멈췄다. 기다림이 지겨운 게 아니라 좋다니.

고백하자면,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살가두처럼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 촬영을 밥벌이로 삼고 살면서도 그렇다. 한자리에 붙박여 빛이 오기를, 사람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 가만히가 그렇게 어렵다. 십 분만 지나도 엉덩이가 들썩인다. 이만하면 됐다 싶고, 다른 데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안에 챙겨야 할 다른 그림들이 머릿속에서 아우성친다. 가끔은 이를 악물고 버텨 보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한 시간을 못 넘기고 자리를 턴다. 그러고는 나중에 늘 곱씹는다. '거기서 한 시간만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 살가두 같은 이들이 몇 달씩 한 사람 곁에 머물며 기어이 그 좋은 얼굴을 얻어내는 일이, 내게는 경이롭다 못해 아득하다. 오래전부터 사진가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다. 좋은 사진은 좋은 위치가 아니라 오래 기다린 자리에서 나온다고. 머리로는 다 안다. 몸이 못 따라갈 뿐이다. 못 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안다. 그를 존경하는 건 그가 찍은 사진 때문만이 아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평생 견뎌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고 살가두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건 아니다.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내 손의 경망스러움을 붙들어 맸다. 최소한 타인을 함부로 찍지는 않는 것.

경제학자에서 사진사로…
세계 곳곳의 노동자와 난민 곁에 머무르며 그들을 찍다

경제학자였던 살가두는 서른이 다 돼서야 카메라를 들었다. 브라질 군사독재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해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아내의 카메라를 우연히 만지고는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틀었다. 숫자로 세계를 읽던 사람이 빛으로 세계를 읽기로 한 것이다. 그 뒤 반세기 동안 그는 흑백으로 인간을 찍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농민, 사헬의 기아, 세계 곳곳의 광부와 노동자, 국경을 넘는 난민들. 그의 사진 속 가난한 이들은 한 번도 비참하게 찍힌 적이 없다. 굶주려 뼈만 남은 아이조차 언제나 존엄했다. 그는 부자 나라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의 기아를 보여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들 자신이 세계의 불균형이 낳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르완다의 학살을 오래 들여다본 뒤 그는 한 번 무너졌고, 한동안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리고 고향 브라질의 헐벗은 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되살리고서야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그 땅이 다시 숲이 되기까지 이십 년이 걸렸으니 한자리에서 몇 시간을 버티는 사람이 이번에는 한자리에서 이십 년을 기다린 셈이다.

『세바스치앙 살가두, 나의 땅에서 온 지구로』는 그가 처음으로 제 인생과 사진을 육성으로 털어놓은 책이다. 이 책이 심금을 울린 건 위대한 작업의 목록이 아니라 한 줄의 고백 때문이었다. 그가 찍어 온 사진들은 결코 혼자 일궈 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 원주민들이, 노동자들이 그들의 순간을 나눠주는 것을 허락했기에 가능했으니, 살가두의 위대한 사진은 그들이 준 선물이었다는 것.

나는 그 문장을 만난 후 사람 앞에서 카메라를 들 때마다 되뇐다. 아무리 스쳐가는 여행자라도 사람을 찍을 때는 최소한의 교감을 나눈 뒤에야 셔터를 눌러야지. 방법은 단순하다. 먼저 카메라를 내려두고 눈을 맞춘다. 웃어 보인다. 통하지 않는 말이라도 몇 마디 건네고 그가 하

는 일을 한참 지켜본다. 그러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을 돌려주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면 그때 렌즈를 든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린다. 어떤 날은 한 시간을 곁에 앉아 있고도 한 장을 못 찍는다. 그래도 괜찮다. 교감 없이 훔치듯 찍은 사진은 어차피 끝내 선택받지 못한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잘 나왔어도 고르는 자리에서 손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사진이 된다.

그들이 내준 것은 얼굴만이 아니라 밥상과 짐칸 그리고 위안

나는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오래 떠돌았다. 국경을 넘고 또 넘었고, 도시보다 시골 마을에 오래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에게 얼굴을 잘 내주었다. 카메라를 들면 아이들이 먼저 몰려들었고, 노인들은 손사래 대신 웃음을 지어 보였으며, 일하던 이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곁눈으로 나를 살폈다. 찍지 말라는 사람보다 왜 나는 안 찍느냐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내준 것은 얼굴만이 아니었다. 밥때가 되면 낯선 나를 불러 함께 밥을 먹었다. 길가의 트럭 짐칸에 얻어 타기도 부지기수였다. 짐짝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가면서도 짐칸의 사람들은 물을 나눠주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 자꾸 뭔가를 설명했다. 어느 집에서는 하룻밤 재워주고는 이튿날 아침 갓 구운 빵과 오이 반쪽, 삶은 달걀 두 개가 담긴 도시락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들은 내줄 것이 많아서 내준 게 아니었다. 가진 게 적어도 남에게 건넬 것은 늘 있다는 걸, 그 밥상과 짐칸과 봉투에서 배웠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조금도 못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교실이 아니라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웠다. 내 청년기를 살찌운 팔 할은 그 이웃들이었다. 살가두는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느낀 외로움, 그리고 인디언들이 내게 주었던 위안"이 함께 떠오른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 옛 사진첩을 넘기다 그 얼굴들과 마주치면, 그 시절의 막막함과 그들이 건네준 위안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무치게 그립다. 그때 내가 받은 것에 견주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월이 흘러 촬영을 밥벌이로 삼게 된 뒤 광고 촬영을 위해 뉴욕에 갔을 때였다. 거기서 정반대의 세계를 만났다. 거리에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 물었다. 방금 나를 찍었느냐고. 아니라고, 그저 도시 풍경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도 화면을 보여 달라고 했다. 보여주면 수많은 군중 속에서 깨알같이 박힌 자신의 모습을 기어이 찾아내고는, 이 컷을 지워 달라고 했다. 처음엔 야박하다 싶었다. 그러나 곧 알았다. 그들은 자기 얼굴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물을 권리를 알고 있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촬영감독 입장에서는 일종의 봉변이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옛 이웃들에게 미안해졌다. 그들이 얼굴을 쉽게 내준 것은 순박해서가 아니라 제 얼굴이 어느 나라 어느 지면에 어떻게 실릴지 따져 물을 언어를 아직 품지 못했을 뿐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 무방비를 너무 쉽게 받아왔던 게 아닐까. 선물이라 불렀지만 실은 내 입장만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살가두가 몇 달씩 사람들 곁에 머물러 정성을 다한 이유가 다시 새겨졌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무는 일만이 세상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코란을 품에 안고 카메라 앞에 선 로힝야 소년. 난민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한 사람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고 싶었다.

낯선 손님에게 커피를 따라주는 시리아 사람. 전쟁이 많은 것을 무너뜨린 뒤에도 환대는 여전했다.

양 떼가 지나는 길가에 선 팔레스타인 아이들.
뉴스가 사건으로만 전하는 땅에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있다.

다시 불균형의 세계로 향하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무르며 작업하는 사진사로

나는 다시 불균형의 세계로 향한다. 이번에는 스쳐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그들 곁에 오래 머무르며 작업하는 사진사로.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사람으로.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할퀴고 간 자리를 사람들이 제 손으로 재건하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만행 속에서 여전히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는 일상을 보려 한다. 그리고 국경 너머로 밀려난 로힝야 난민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존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나는 살가두에게서 배웠다. 청년기의 나를 먹이고 재우고 키운 것이 그 세계의 이웃들이었으니 이제 할 일은 그들의 처지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으로 빚이 갚아질 리 없다. 그럼에도 카메라를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갚음이란 그것밖에는.

살가두의 사진에 내 작업을 견주는 건 염치없다. 그는 인류의 고통을 찍어 세계의 양심을 흔들었고 나는 길에서 만난 얼굴 몇을 찍었을 뿐이니까. 그러나 렌즈 뒤에서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만은, 오래전 그에게서 배워 여태 지켜왔다. 가난한 마을에서든 뉴욕의 거리에서든 지켜야 할 것은 매번 같았다. 살가두는 지난해 봄 파리에서 여든하나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을 찍으러 간 밀림에서 얻은 병이 끝내 그의 몸을 갉았다고 한다. 평생 남의 고통 곁에 오래 머문 사람이 그 머묾의 대가를 제 몸으로 치른 셈이다.

"그들은 내게 사진을 주었고, 나는 그들에게서 사진을 받았다."

그가 평생 증명한 것은 결국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진은 잘 찍는 자가 아니라 잘 건네받는 자에게 온다는 것. 나는 여태 그만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깐 기다리는 일만은 할 수 있다. 눈을 맞추고, 웃어 보이고, 그가 나를 향해 자세를 고쳐 앉아 주기를 기다리는 일. 그 짧은 기다림만은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영화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
맹렬하게 여행하고 틈틈이 글을 쓴다.
filmrodrigo@naver.com

시평

AI 시대 한국경제

생산성 혁신의 조건

AI가 보고서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얼마 전까지 전문가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었던 일들이 이제 컴퓨터 화면 안에서 순식간에 이뤄진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생산은 늘어나고, AI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미래다. 그러나 같은 기술을 보며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리며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미래다.

두 전망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가 미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의 수준을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술 발전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사회적·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기회를 얻고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봐야 한다.

AI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한국에 특히 절실하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생활 수준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산성을 높여야 할 곳과 새로운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AI 도입 과정에서 경제에 새로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I의 성과가 한국경제의 오랜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생산성 향상을 이끌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약한 고리(weak link)'다. 경제활동은 여러 작업이 연결돼 이뤄진다. 일부 작업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다른 작업이 병목으로 남아 있으면 전체 업무는 효율화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단축되더라도 임상시험과 생산, 그리고 의료현장에 도입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AI가 회의 자료를 몇 초 만에 작성해도 검토와 결재에 몇 주가 걸리면 사업 판단은 빨라지지 않는다. 민원에 대한 답변 초안이 자동으로 만들어져도 그 이후의 여러 절차가 변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답변을 받는 시간은 줄어들기 어렵다. 문서 초안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과 업무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화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AI 시대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최고 성능의 모델을 확보하는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생산과 서비스에 기술을 연결하면서 병목을 풀어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반도체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의 토대를 강화한다면, 조직과 제도를 바꾸는 투자는 그 토대 위에서 실제로 성과가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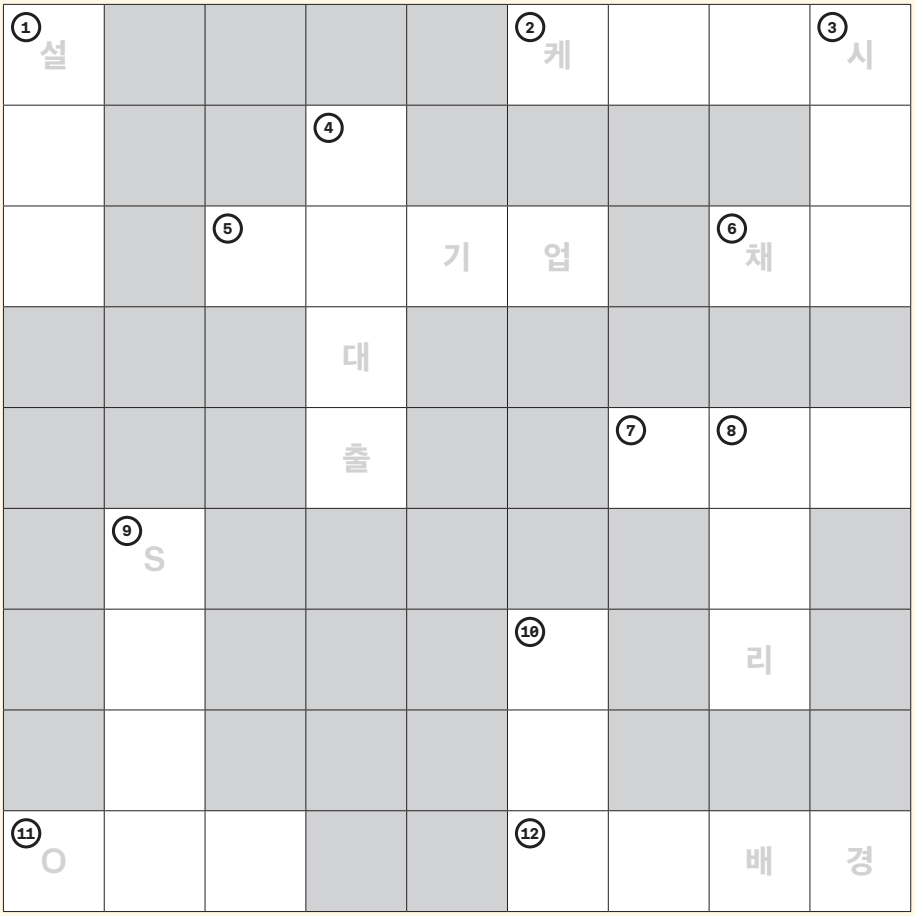
AI가 널리 도입되고 이용되는 상황에서 업무 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질문해야 한다. 핵심은 기존 업무에 AI를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입에서 산출까지 이어지는 업무 경로 전체를 재검토하고 일하는 방식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이는 여러 기업에 기회이자 부담이다. 어떤 기업은 빠르게 성과를 낼 것이고, 높은 전환 비용을 치를 기업도 있을 것이고, 결국 도태될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와 역량 제고를 전제로 하는 면도 있다.

우리는 앞선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 새 기술을 이용해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역량이 필요하다. AI가 보여주기 시작한 가능성을 사회와 경제 전체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한국의 미래 성장 과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낱말퍼즐

시사·경제 용어를 낱말 풀이 형식으로 익혀 보세요.
이달의 『나라경제』를 열심히 읽은 독자라면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을 문제들입니다.



가로퍼즐

②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오른 인물.
⑤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 좀비기업과 같은 말.
⑥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것의 가격은 내려간다.
⑦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GLP-1 계열 약물이다.
⑪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조. 공적개발원조의 영문 약어.
⑫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과거에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통칭하는 말로 2026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기존 '다문화학생'이라는 명칭을 '○○○○학생'으로 변경했다.

세로퍼즐

① 비만과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당분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영국,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③ 한 국가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법적 지위로 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도 지닌다.
④ 가구 및 개인이 생계유지, 주택 구입, 기타 소비 등의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의 총칭.
⑧ 이자율이 과거 또는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⑨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7대 첨단기술 육성(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이 포함된다.
⑩ 지난 9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화제가 된 상어의 별명.

· **11월 20일까지 kdi_nara@naver.com 혹은 『나라경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해 커피쿠폰(1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11월 27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Immigrants must adjust to their new societies – and societies need to adjust too.”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며,
그 사회 역시 변해야 한다.**

Kofi Anna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둔 한국에서 이민자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달라진 현실에 맞춰 서로를 대하는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